2012 국내외 관계자 초청 워크숍
및 강제동원 사진전시회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의 향후 과제

일시 : 2012년 6월 20일(수) 10:00

장소 : 제2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

전시 : 제2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앞 (6.20)
국회도서관 2층 전시공간 (6.21~27)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이명수 의원실(선진통일당)

# ▣ 식 순 ▣

| 시간 | 내용 |
|---|---|
| | ◎ 식전행사 |
| 10:00 ~ 10:03 | 개회(정혜경, 조사2과장) |
| 10:03 ~ 10:08 | 인사말씀(박인환 위원장) |
| 10:08 ~ 10:30 | 축사 : 이용섭(민주통합당의원), 정선태(법제처장) 외 |
| | ◎ 제1부 사회 : 정혜경(조사2과장) |
| 10:30 ~ 10:40 | [경과보고]위원회 진상조사의 성과와 과제(허광무, 조사1과장) |
| 10:40 ~ 11:05 | [기조발제]**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의와 당위성**<br>(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
| 11:05 ~ 11:35 | **대일과거 청산, 시효란 없다 - 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br>(이명수, 선진통일당 의원) |
| 11:35 ~ 12:05 | **한국 지방정부 차원의 일제강제동원피해 지원 사례와 향후 과제**<br>(김선호,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의원) |
| 12:05 ~ 13:20 | 점심 식사 |
| 13:20 ~13:25 | ◎ 제2부 사회 : 하종문(한신대 교수) |
| 13:25 ~ 13:55 | **전후 일본의 한국인 강제동원피해 미보상과 문제점**<br>(樋口雄一,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장) |
| 13:55 ~ 14:25 | **전후 조선인 유골실태 및 일본인 유골수습 사례**<br>(殿平善彦, 강제연행·강제노동 희생자를 생각하는 홋카이도 포럼 공동대표) |
| 14:25 ~ 14:40 | 휴식 |
| 14:40 ~ 15:10 | **난징대학살 진상조사**<br>(段月萍, 전 난징대학살기념관 부관장) |
| 15:10 ~ 15:40 | **과거사 극복 : 국가사회주의와 화해를 향한 긴 여정**<br>**-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의 활동과 그 국제협력기구들**<br>(Günter Saathoff,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 공동이사) |
| 15:40 ~ 16:00 | 휴식 |
| 16:00 ~16:05 | ◎ 제3부 사회 : 이치수((사)한국국정연구원장) |
| 16:05 ~ 17:30 | ○ 종합토론 : 이상돈(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효순(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강렬(국민일보 논설위원), 신주백(연세대학교 HK연구교수),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
| 17:30 ~ 17:40 | 폐회식 및 안내 |

# ▣ 목 차 ▣

[인사말]
박인환(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基調發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의와 당위성 1
한상도(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主題發表]
대일과거 청산, 시효란 없다 - 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 25
국회의원 이명수(선진통일당, 충남 아산)

한국 지방정부 차원의 일제강제동원피해 지원 사례와 향후 과제 39
- 광주광역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김선호(광주광역시 교육의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고문)

전후 일본의 한국인 강제동원피해 미보상과 문제점 63
히구치 유이치(樋口雄一,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장)

전후 조선인 유골실태 및 일본인 유골수집 사례 75
도노히라 요시히코(殿平善彦, 강제연행·강제노동희생자를 생각하는
홋카이도 포럼 공동대표)

난징대학살 진상조사 87
두안 웨핑(段月萍, 전 난징대학살조난동포기념관 부관장, 연구원,
난징대학살역사연구회 원 부비서장, 현 이사)

과거사 극복 : 국가사회주의와 화해의 긴 여정 95
-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의 활동과 국제 협력 기구들
귄터 자트호프(Günter Saathoff,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EVZ) 공동이사)

# ▣ 目　次 ▣

[ごあいさつ]
朴仁煥（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など支援委員会 委員長）

[基調発題]
日帝強占下強制動員の被害真相究明の歴史的な意義と当為性 13
韓相祷(建国大学校史学科教授)

[主題発表]
対日過去清算、時効とは得ない － アジア平和のための韓国政府の役割 32
国会議員 李明洙(先進統一党、忠南牙山)

韓国地方政府次元の日帝強制動員被害支援事例と向後課題 51
－ 光州広域市の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支援条例を中心に
金善浩(光州広域市教育議員、「勤労挺身隊ハルモニと共にする市民会」顧問)

戦後日本の韓国人強制動員被害未補償と問題点 69
樋口雄一(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会長)

戦後朝鮮人遺骨実態及び日本人遺骨収集事例 81
殿平善彦(強制連行･強制労働犠牲者を考える北海道フォーラム共同代表)

南京大屠杀真相调查 91
段月萍(系原侵华日军南京大屠杀纪念馆副馆长, 副研究员,
原侵华日军南京大屠杀史研究会秘书长, 现理事)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National Socialism
and the long road to reconciliation 104
- the work of the Foundation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and its international partner organizations
Günter Saathoff(Co-Director of the Foundation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EVZ), Germany)

# 인 사 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박 인 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뜻 깊은 국제 워크숍 행사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국내외 내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워크숍에서 발제까지 맡아 주신 이명수 의원님과 함께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중국, 일본, 독일, 한국의 여러 전문가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년 11월 출범한 우리 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지금까지 22만 6천여 건에 이르는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제의 강제동원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강제동원 관련 중요사건들 중 모두 32건의 진상조사를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술자료집과 총서 등을 발간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해서 2008년부터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의 가해국인 일본은 그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자세

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과거 태평양전쟁 당시 저지른 가혹한 침략전쟁과 이에 따른 주민학살, 강제동원 등 비인도적 전쟁범죄 사실의 은폐·왜곡과 더불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영토 분쟁 등으로 이웃 나라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의 하나인 독일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정부간 협정을 통하여, 국가적 배상뿐만 아니라 개인의 피해배상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과 크게 대비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국제 워크숍은, 이처럼 비인도적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해 온 일본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죄를 통하여 태평양 시대, 평화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 및 유족들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함으로써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동원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개별적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위원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의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그 동안의 성과를 되새겨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대로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 워크숍을 위하여, 국내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해외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 분들이 직접 워크숍에 참가하셨고, 독일에서는 직접 참가하지는 못하였지만, 귀중한 발제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전문가 분들의 귀중한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우리 모두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분들, 그리고 여러 내빈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함께 하신 분들의 앞날에 큰 보람과 성취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ごあいさつ

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
国外強制動員犠牲者など支援委員会
委員長　朴仁煥

ご多忙の中、このように意義深い国際ワークショップにご参加いただいた国内外の皆さんに、まずは感謝の意を表します。また、日頃わが委員会の活動に深い関心を持たれ、ワークショップでご提案をしてくださる李明洙(イ・ミョンス)議員をはじめ、発表や討論を引き受けてくださった中国、日本、ドイツ、韓国の専門家の皆さんにも感謝の意を表します。

2004年11月に結成したわが委員会は、今日までの7年間の調査活動を通じて、約22万　6千件に上る強制動員の被害申告を受付け、これに対する調査を完了致しました。また、日帝の強制動員の実態をより明確に究明するため、関連事件の中で32件の真相調査を完了し、これを基にして口述資料集と叢書などを発刊する成果を上げました。一方、このような成果をもとに、2008年からは強制動員被害者に対する各種支援業務も行っております。

しかし、こういう韓国政府の努力にも拘らず、強制動員の加害国である日本はその事実を隠したり否定するなど、問題解決に向けた適切な措置を取り組まないまま消極的な姿勢を貫いています。そればかりか、過去太平洋戦争当時に起した過酷な侵略戦争と、これによる住民虐殺、強制動員など非人道的な戦争犯罪の事実を隠蔽・歪曲し、また、靖国神社参拝、歴史教科書歪曲、領土紛争などで近隣の国々と持続的に葛藤を引き起しています。これは第2次世界大戦の戦犯国のひとつであるドイツは被害を受けたヨーロッパの各国と政府間の協定を通じて、国家としての賠償だけではな

く個人の被害賠償に向けた努力も真摯に行なっている姿とは大きく異なっています。

今回の国際ワークショップは、このように非人道的な強制動員の事実を否定してきた日本にその責任を認めさせ、誠実な謝罪を通じて太平洋の時代、平和の未来を望ましく設計させるために設けた場であります。同時に、高齢となった強制動員被害者及び遺族たちの長きにわたる傷跡を癒し、慰労することによって国民和合を図るための場でもあります。そうするためには、強制動員の明確な真相究明と個別の被害に対する調査がよりもっと必要だと考えています。

まさにこのような観点からわが委員会は、「日帝強占下強制制動員真相究明のための今後の課題」という主題で、今までの成果を振り返りながらこれからの方向を模索するために国際ワークショップを開催することにしました。

この度の国際ワークショップのために、国内の専門家と海外からは中国をはじめ日本の専門家の皆さんのご参加をいただきました。ドイツからは直接ご参加はいただけませんでしたが、貴重なご提案を送っていただきました。

今日、この場で多くの専門家の皆さんの貴重なご提案や討論を通じて、私たちは太平洋戦争時の日帝強制動員に対する真相究明の重要性をもう一度考えてみる貴重な時間とな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お忙しい中、この場にご参加いただいた皆さんに今一度、感謝の意を表しながら、、皆さんのますますのご健勝を祈念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의와 당위성

한상도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1. 진상규명 작업은 어디까지 와 있나?

2004년 3월 5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74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544호)이 제정 공포되었고, 같은 해 11월 10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반세기가 흐르도록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제대로 밝혀보자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서,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자행된 한국인 강제동원의 진상조사와 그 피해 보상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1)]

이후 2007년 12월 10일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669호)에 의해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설립됨으로써, 통합사무국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업무가 추가되었다. 그 후 2010년 3월 22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143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5호)이 제정됨으로써, 그 업무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

1) 그간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법제화 작업의 경과에 대해서는 金廣烈, 「한국의 '역사청산' 법제화 운동에 대한 연구: 일제 강제동원피해 규명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4, 2008. 6이 참조된다.

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 계승되기에 이르렀다.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피해를 규명하는 일은 통칭 '과거사 정리'라는 국책사업의 일환이었지만, 한·일 양국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강제동원된 분들의 피해 진상규명과 해외에 방치된 유골을 수습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과 취지가 여타 사업과는 크게 다르다고 하겠다.

2001년 10월 12일 국회에서 법안 발의 시 천명한 입법 취지에 따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건국 이후 최초로 한국 정부가 일제의 전쟁에 동원당한 자국민의 피해를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는 법"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법에 근거하여 발족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피해당사국이 스스로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역사상 기념비적인 정부기구라고 할 만하다.

2004년 11월 발족 이래 7년간의 활동성과를 통해 국내 피해자에 대한 위로를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및 동아시아 평화 정착의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피해 및 진상조사, 지원금 신청건수는 전체 피해 규모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존속기간(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가능)이 명시된 '한시기구'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 2. 잊어서 안 되는 기억으로 간직해야 한다

1937년 7월 중일전쟁 개시 이후 침략전쟁의 확대와 장기화에 따라, 일제는 전쟁물자의 보급과 노동력 공급을 위해, 국가차원의 관리 및 통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國家總動員法'(총 22개조)을 제정 공포하고, 이와 함께 각종 칙령과 閣令·省令·告示 등을 통해 강제적인 인적·물적 동원[2]이 가능토록 하였다.

국가총동원법[3] 제1조에서는 '국가총동원'의 개념을 "戰時(전쟁에 준하는 事變의 경

2) '강제동원'은 '강제연행' '강제연행·강제노동' 등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을 수행하기 위해 시행한 인적·물적 동원을 가리킨다.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동원지역은 한국, 만주국, 중국, 대만, 남사할린, 미얀마, 타이, 인도차이나,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쟈바, 뉴기니, 미크로네시아 등, 일본의 식민지 및 점령지·전쟁터였다.

3) 1938년 4월 공포하여 5월부터 시행한 일본의 전시통제법으로,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이 법에 근거하여 전시에는 노동력·물자·자금·시

우를 포함)에 국방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제2조에서는 총동원 물자의 범위를 ① 병기・함정・탄약・기타 군용물자, ② 국가총동원 상 필요한 의복・식량・음료・사료, ③ 수송용・통신용・토목건축용 물자, ④ 연료・전력・기계기구・장치 등 기타 물자, ⑤ 이외 '칙령'으로 지정하는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물자로 규정하였다. 제2조에서 규정한 물자를 생산·수송하기 위한 인력이 '노무자'와 '군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동원되었다.

제3조의 총동원 업무는 물자의 생산・유통・수출입을 비롯하여 운수・통신・금융・위생・교육・연구・정보・선전 등 총동원상 필요한 업무로 규정되었다. 특히 인적자원 통제에 관한 내용은 징용(제4조), 국민 협력(제5조), 노무 통제(제6조), 쟁의 통제( 제7조), 종업원의 공용(제13조 제2항), 국민 등록(제21조), 제기능자 양성(22조) 등이었다. 1943년 이후 한층 더 강화되어 '몽땅 동원'이라 불릴 지경에 이르렀다.[4]

"저녁에 자다가 勞務(동원업무 담당자)와 우리 부락 里長이 나오라고 해서, 강제로 끌려 간" 이들은 군이나 면 직원과 경찰서 고등계 형사 등의 인솔 하에 면사무소→군청→도청 소재지를 거쳐, 부산항(일부는 여수나 원산항)에서 關釜連絡船에 올랐다. 시모노세키(下關) 등지에 도착한 이들은 다시 열차편으로 탄광이나 공장의 작업현장에 배치되었다. "어린애 주먹만한 주먹밥 두 덩어리, 아무 것도 들어간 것이 없는 파국반 대접"을 먹으며,[5] 엄중한 감시 하에서 작업장 바깥으로 출입이 금지된 채 억압과 차별의 시간과 싸우는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다.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경우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겠다.

강제동원피해[6]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은 첫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의 발굴·수습·

---

설·사업·물가·출판 등을 통제하였고, 평상시에는 직업능력조사, 기능자 양성, 물자비축 등을 명령했다. 일본 본토는 물론, 일제강점기 치하 한반도와 타이완, 만주국에도 적용되어, 강제징용, 징병(징병은 1943년에 시행), 식량 공출 등 전시통제체제가 시행되었다. 일제 패망 후인 1946년 4월 1일 폐지되었다.

4) 일본 정부가 공개한 통계에 의하면, 강제동원된 한인은 군인 230,002명, 노무 및 군무원 7,360,247명 등 총 7,590,249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군위안부 등 性동원자와, 만주지역에 동원된 한인 노무동원자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복동원 인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인원은 약 300만 명을 헤아릴 것으로 추정된다.

5) 「金東業 증언」·「閔丙珠 증언」, 『가긴 어딜가? 헌병이 총을 들고 지키는데』(강제동원구술기록집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 42·88쪽.

6) 여기에서 말하는 '강제동원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봉환, 둘째, 1965년 한일협정에서 제외된 일본군 위안부·원폭·사할린 문제 등의 처리, 셋째, 아시아·태평양 전지역에서 자행된 사건·사고 진상(실태)조사, 넷째, 후생연금을 위시한 미수금 자료 입수 등 일제의 가해사실을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제의 가혹행위와 강제동원, 군위안부 피해, 유골 방치행위 등이 인류의 보편적 관습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세계에 역사적 사실과 진상을 정확히 알리고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 가는 수레가 엎어지면, 뒤따라가는 수레는 이를 경계로 삼아야 한다〔前車覆, 後車誡 / 『漢書』 賈誼傳〕", "앞서 겪은 아픔을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환난을 미리 삼간다〔予其懲而毖後患 / 『詩經』 小毖篇〕"라는 말이 있듯이, '강제동원'이라는 잘못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기억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서, 피해 진상규명 작업의 역사적 의의와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고, 미래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의 거울로 삼아, 올바르고 정의로운 미래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피해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고통을 보듬어 안음으로써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 3. 동아시아 공영의 선결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國際人權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7]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억류자의 조속한 귀환 및 송환, 유해의 조속한 송환, 묘지의 존중, 일상생활의 회

---

를 말한다('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전체 강제동원 피해자의 규모는 연인원 800만 명을 헤아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7) 좁은 뜻으로는 交戰法規 중 특히 전쟁희생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제네바 협정), 넓은 뜻으로는 개인의 존중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국제법규범을 가리킨다. 1971년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소집한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과 발전을 위한 정부전문가회의'에서 최초로 국제인권법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포괄적인 의미의 국제인권법에는 평시에 있어서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을 목표로 하는 인권법과, 전시에 있어서 교전국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교전법규가 모두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인간 및 그들에게 불가결한 재산을 보호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보호받아야 할 가치임과, 강제동원에 따른 억류·학대·부상·사망·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해의 본국 송환·안치는 해당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이러한 책무를 소홀히 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 발발에 대한 사죄와 반성, 피해자 보상 등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2차 세계대전의 '戰犯國' 중 하나인 독일은 나치와 기업이 자행한 전쟁범죄와 강제노동에 대해 반성하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정부간 협정을 통해 피해배상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8] 대통령·총리 등이 피해국 국민들을 향해 수시로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하고 있다.

1988년 미국 의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로 격리 수용했던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고, 2008년에는 하원에서 건국 초기 노예제 시행에 대한 사과 결의안을 채택했고, 2009년 6월 상원에서도 같은 결의안을 의결했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의 하나가 과거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올바른 진로 설정을 지향하는 국가의 책임의식과 실천에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는 과거의 비인도주의적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는 도덕적 책무를 일깨우며, 이를 솔선수범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품격과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9]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기 강제동원 피해국가인 이스라엘은 1950년대부

---

8) '연방배상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피해자별 개인에게 배상(1953), 독일-이스라엘 간 룩셈부르크협정 체결(1952), 서유럽 12개국과 양자간 나치피해보상 포괄협정 체결 및 배상(1959~64), 러시아·폴란드 등 주변국가와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1990). '기억·책임 그리고 미래(Erinnerung, Verantwortung, Zukunft)'재단을 설립하여(2000), 2003년 현재, 제2차 세계대전 전쟁책임과 관련하여 총 614억 600만 유로(91조 8천억 원)를 배상하였다. 이 재단의 주요 업무는 첫째, 피해자 생활지원·의료 사회보험 지원 등 지원업무, 둘째, 강제노동 피해에 대한 역사적 연구 및 교육 지원('강제노동 아카이브 1939~1945' 운영), 셋째, 역사교육을 통한 인권 의식의 향상, 넷째, 그밖에 강제노동의 현장을 보존하는 사업(강제수용소 복원) 등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고, '가해의 흔적'을 보존하고 알림으로써, 인권의 소중함을 널리 전파시키는 것을 재단의 '책무'로 삼고 있다.

9) 이와 함께 JPAC(미 전쟁포로·실종자 합동확인 사령부)를 설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베트남전쟁·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해외에 개입한 전쟁·분쟁 지역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8만3천 명 추정) 미군·미국인의 유해를 추적·발굴·수습·안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간 1억4천만~1억5천만 달러(약 1천700억원)의 경비와 450명의 전문인력이 동원되어 "전세계에 흩어진 유해를 찾아 미국으로 봉환하고 유족에게 되돌려 준다"는 기치를 내걸고, 국가의 책무 수행에 충실하고 있다.

터 '야드바셈(상설조사기구)'을 설치하여, 유태인에 대한 강제수용, 강제노동, 자산몰수, 학대와 홀로코스트 등에 대한 국가적 조사작업을 추진하고, 희생자 추도 및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기록보존·교육의 메카이자 세계적 명소로 성장시켰다.[10)]

이렇듯 전범국가 뿐 아니라 피해국가에서 조차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반성과 함께,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과 달리, 가해국인 일본은 아직도 식민지 지배와 강제동원의 가해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사할린, 원폭 피해에 대해 부분적인 책임만 인정하며, 일본 정부 스스로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후생연금 탈퇴수당 문제조차, 1945년 당시의 액면가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한 피해자에게 99엔(소위 '99엔 사건')을 지급하였다. 이렇듯 과거의 잘못을 숨기고 부정하는 데 급급하기에, 군위안부 문제나 731부대 생체실험, 그 밖의 강제동원 중 학대·학살 등 각종 잔학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일본 내 징용자 등의 유골 조사와 송환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일본의 '전쟁책임'을 부정하려는 보수우익세력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유골봉환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심한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며, 짜증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내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에게 포악하게 굴어서는 안 되며, 무리가 많다고 수효가 적은 이들을 능멸해서는 아니 된다〔强不暴弱 衆不凌寡〕"는 중국 속담은 인간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른 국가가 힘을 내세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국을 핍박·위협하는 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영은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들과는 달리, 일본 국회의원 중에는 '전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분이 적지 않다. 1970년대 이후 전후보상연구회,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의원 연맹 등 연구단

10) '야드바셈(Yad Vashem)'은 히브리어로 "이름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1935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 학살, 희생된 약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추념하고, 전 세계와 인류에게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1953년 이스라엘 국회가 입법을 추진한 상설 조사기구 및 기념시설을 가리키는 총칭이다. 단순한 추도를 넘어 나치의 잔혹행위에 대한 피해사실과 진상규명, 기록보존, 학술연구(Yad Vashem Studies) 및 국제적 학술회의 개최 등의 종합적 기능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0만여 평의 시설 안에 2005년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과 업무를 강화 확대하고 있다. 연간 수백만 명의 전세계 관광객과 연구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체가 설립되어, 법안 발의 및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래 사할린, 원폭, 시베리아 포로 등 일본인과 관련한 피해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에서 설립되어, 한국인 피해 문제를 포괄하는 연구단체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항구평화를 위한 진상규명법 성립 의원연맹'과, '위안부문제와 난징사건의 진실을 검증하는 의원 모임' 등이 활동하고 있다.[11] 실로 다행스런 일로써, 일본 정부 및 보수우익세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활동에 수반하여 일본 사회의 양심적인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일 양국 민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진상규명 노력을 살펴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의 중층적 성격(민족・계급・여성・평화・동아시아 미래문제)을 토대로 한 차원 높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문제 해결을 지향하며,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통해 일본 사회의 반성을 넘어선 동아시아 민주주의 정착 및 평화공동체 구축을 지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12]

---

11) 일본 내 양심적·親韓 정치인(예,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의원연맹'), 전문가, 시민단체(NPO), 종교인(불교계) 등은 식민지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유골봉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기관으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대해 '놀랍고, 부럽고, 부끄러운 심정'이며, "한국을 본받아 일본 정부도 더욱 분발하여 피해조사와 유골봉환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12) 특히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이하여,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활동과 관련하여 추진된 주요사실로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노무자공탁금문서 부본을 전달하였고(4.5), 오카다 가쓰야 일본외상이 기자회견에서 '한국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준 점'을 사과하였으며(4.19), 제4차 유텐사에 보관 중이던 한국인 군인·군속유골봉환 추도식(한·일정부간 공식행사)에 처음으로 오카다 외상이 참석하여, 추도사를 낭독하였다(5.17). 한·일 양국 지식인, '1910년 강제병합조약 무효' 선언(6.10),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대일과거청산문제와 관련한 공동입장 채택(6.2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방안'을 수립하였고(6.21), 또 센고쿠 요시토 일본 관방장관이 개인청구권 소멸 문제, 한반도 출신 강제동원자 유골반환, 재한 원폭자,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표명하였고(7.7), 미쓰비시중공업(주)에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협의에 동의한다는 회신문을 발송하였다(7.14).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일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사할린거주 한국인 지원, 한반도 출신자 유골봉환 지원, 문화재 인도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8.10). 일본교도통신이 전시체제기 우편저금의 존재 사실을 전하였다.(8.18). 일본 정부에서 한국 정부(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노무동원자사망기록(매화장인허증)' 5,600매를 전달하였고(8.26), 학계를 포함한 한일시민단체가 공동으로 '1910년 강제병합조약의 무효'를 선언하였다(8.29).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이 '일본강제동원네트워크' 및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구내의 피해자 실태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는(9.8) 등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 같은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양국 학자 및 시민들이 참여한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2011.8.6).

향후 이 같은 한·일 양국 시민사회 및 지식인간의 연대를 한・중・일 3국의 정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종교계·언론계 등의 역량을 결집하는 차원으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조직체의 설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진상규명 작업의 활성화 및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3)]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이 궁극적으로 일본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동북아로 이동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체제경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들을 감안할 경우,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이 한일관계의 진전을 가늠하는 방향타 노릇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일본의 국익에도 직결될 것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일 간의 정치적 갈등과 영토분쟁 등의 현안 해결 과정에서, 일본의 주장이 국제적 설득력과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갖추고 정의와 진실을 존중하는 국가임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한・일 관계의 과거와 현재는 비단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대만,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일본의 침략전쟁 관련국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향방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가 되는 셈이다.

요컨대 한·중·일 세 나라 간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통합과 동반·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동북아 지역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걸림돌로 남아있는 강제동원피해의 진상규명과 사과·반성 및 보상 조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지이다.

---

13) 이를 위해서는 진정성을 전제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노력,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조사 및 봉환, 사할린·한센병 환자·시베리아포로·BC급 전범 문제 해결, 교과서문제 해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사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 4. 국가가 국민의 응어리를 풀어 주어야 한다[14]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백성을 챙기지 않는 것이 무슨 놈의 국가입니까? 그들이 끌려갈 때에는 나라가 없어서 그리 되었고, 조국이 해방 되어 나라가 생겼을 때에는 나라에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그래서 남을 도와주겠다고 까지 큰소리를 치는 정도 아닙니까? 집에서는 제 부모형제도 모르는 체 하는 주제에 나가서는 남을 돕겠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졸부들의 행태와 무엇이 다릅니까?"[15]

강제동원 피해자 후손의 분노 섞인 탄식이다. 국권 상실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망국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가진 한국근대사의 아픔을 잘 그려내고 있다. 강제동원피해의 상처가 어느새 우리의 가슴 속에 분노와 회한의 멍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처와 기억을 쓰다듬고 치유하는 일은 곧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될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강제동원피해의 진실을 규명하고, 보상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아가 선조의 희생을 기리고, 우리 손으로 그 아픔을 어루만져 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강제동원피해 규명사업과 희생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가의 성숙도와 품격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또 피해당사국이 가해당사국과의 화해를 이끈다는 사실이 얼마나 성숙된 모습인가. 여기에서 진정한 '國格'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16]

---

14) 2010. 3.22 제정 시행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143호) 제1조에서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15) 류연상(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 유족, 전 한독약품 이사), 「사할린 동포에겐 조국이 없었습니다」, 『뉴스레터』 29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1. 9.

16) 한상도, 「시론: 강제동원 진상규명 작업, '국격'의 문제이다」, 『중앙일보』 2010년 1월 30일.

그러면 향후 피해 진상규명 작업은 어떤 방향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인가? 먼저 가해국인 일본에 역사적 책임과 반성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역사인식에 바탕한 일본 시민사회를 포함한 양심적 세력과의 대승적 차원의 화해·교류·협력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춘 정부 차원의 기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제에 의한 피해 역사를 공유하고 유해 발굴·봉환 사업에 직결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차원의 협조, 한민족 공동체로서의 북한과의 대일 공조 및 통일 후 역사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협조 필요성 등의 과제를 상정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서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마땅할 것이다.

1965년 한일회담 청구권협정 체결 시, 군위안부·사할린·원폭·후생연금 탈퇴수당 등의 문제는 배제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사할린·원폭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 정부가 영주귀국사업, 원폭피해자 수첩발급 및 위로금·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 중이나, '그 내용과 지원 규모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와 우리 외교 당국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여전히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 또 사할린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 한반도 내 강제동원피해 문제, 시베리아포로 문제에 대한 조사와 규명 작업이 요구되며, 노무자공탁금 문서 외에 후생연금명부나 우편저금 자료 등, 19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재논의 역시 필요하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리고 한시바삐 해결해야 할 민원성 과제가 산적해 있는 셈이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 측과 적극적인 외교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미결·보류·미완의 과제들을 협의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로써,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협상을 위해서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실태와 피해 사실 입증할 자료의 제시와 그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할 것인 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작업을 통한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의 결과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 작업이 진전된다면, 일본 정부의 자료제공 거부 및 은닉 시도

또한 강화될 것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자료의 소멸 가능성과, 관련생존자의 고령화 및 사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피해 진상조사 업무의 강화와 확대가 더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기에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진상조사, 유골봉환, 미수금 등 관련 자료 요구, 기금환수 문제 협의 시 전략적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강제동원피해 사안별 진상조사, 유골의 신원·유족 확인, 유골봉환, 국내 추도시설 관리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유지해 갈 수 있는 조직과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해 두고자 한다.

끝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작업의 기반으로써 학예·연구기능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작업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중국에 731부대나 남경대학살 현장에 기념관 등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피해조사에서 유골봉환, 피해자 구제와 지원, 위령사업과 시민교육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전담하는 상설기구는 없다.

지금 건설 중인 역사관은 강제동원피해라고 하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딛고 한·일 양 국민 및 동아시아 모든 민족이 함께 공존·공영의 미래를 설계하고 논의하는 공간으로서 역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식민지 시기 및 격동의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을 통해 동아시아에 反戰과 평화 인식을 확산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역사관과 사료관·연구센터는 학자들에게만 필요한 공간이 아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치유의 공간'이자, 후손들에게는 '미래로 향한 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결코 단절된 시기가 아니라, 과거의 결과로써 오늘이 있고, 또 오늘이 내일의 시작이자 원인이 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왜 우리가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피해 진상규명 작업을 통한 국가·국민적 차원의 관심 제고와 역사인식의 고양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연구 결과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진실만큼 무겁고 준엄한 심판은 없는 법이며, 진실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관련 자료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일례로 피해자 名簿는 양적인 측면에서 국내 소장기관은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수집·보관하고

있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지만, 강제동원피해 당사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는 1차 사료라는 점을 으뜸으로 꼽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열성적인 조사·발굴·수집작업을 통해, 장롱이나 창고 속에서 깊이 잠들었던 자료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결과이다.[17]

이같은 일차자료를 토대로, 전문연구자로서 직원들의 애착과 열정이 더해졌기에, 그간의 진상규명 작업도 그 의미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하겠다. 금명간 위용을 드러낼 역사관·자료관·연구센터 등의 시설공간이 미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공동체' 시대에 전략적 총본산으로 역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사·연구·간행·전시 관련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역량을 강화해야 하리라는 점을 유념해주기 바란다.

17) 정혜경, 『일본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연구 2』, 선인출판사, 2011, 406~407쪽.

# 日帝強占下強制動員の被害真相究明の歴史的な意義と当為性

韓相祷(建国大学校史学科教授)

## 1。真相究明の作業はどこまできているか?

2004年3月5日「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等に関する特別法」(法律第7174号)及び「同法施行令」(大統領令第18544号)が制定公布され、同年11月10日「対日抗争期国外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員会」が出帆した。半世紀の間明らかにならなかった、間違って知られている事実をちゃんと証してみようという「歴史立て直し」作業の一環として、日帝強占期の日帝によって行なわれた韓国人強制動員の真相調査とその被害補償作業が始まった。1)

以後、2007年12月10日制定された「太平洋戦争前後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に関する法律」(法律第8669号)によって、「太平洋戦争戦後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員会」が設立されて、統合事務局体制で運営された。これを通じて強制動員犠牲者に対する慰労金支給業務が追加された。その後、2010年3月22日「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に関する特別法」(法律第10143号)及び「同法施行令」(大統領令第22125号)が制定され、その業務が「委員会」で継承することになった。

日帝による強制動員被害を究明することは、通称「過去史整理」という国策事業の一環だったが、韓・日両国の関係で解決できずに残っている、強制動員された方々の被害真相究明と海外に放置された遺骨を収拾するというところで、その性格と趣旨がその他の事業とは散々違うと言える。

---

1) その間の「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法制化作業の経過に対しては金広烈、「韓国の'歴史清算'法制化運動に対する研究:日帝強制動員被害究明運動の例を中心に」、『韓日民族問題研究』14, 2008. 6 参照。

2001年10月12日国会で法案発議の際、闡明した立法趣旨によると、「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等に関する特別法案」は「建国以後、最初に韓国政府が日帝の戦争に動員された自国民の被害を調査して真相を明らかにする法」として歴史的な意義を持った。また法を基に発足した、「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委員会」は被害当事国が自ら常設機構を設立して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を実施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世界歴史上記念碑的な政府機構だと言える。

2004年11月発足の後、7年間の活動成果を通じて国内被害者に対する慰労を越え、未来志向的な韓日関係及び、東アジア平和定着の礎となっている。しかし、現在被害及び真相調査、支援金の申請件数は全被害の10%にも及ばない水準で、存続期間(2012年12月31日まで、1年延長可能)が明示された「一時的な機構」という限界を抱いている。

## 2。忘れてはならない記憶として畳み込むべき

1937年7月、中日戦争の開始以後、侵略戦争の拡大と長期化に伴って、日帝は戦争物資の補給と労働力の供給のため、国家次元の管理及び統制の必要を認識し、「国家総動員法」(総22個条) を制定して公布し、これと共に各種の勅令と閣令・省令・告示などを通じて強制的な人的・物的動員[2)]ができるようにした。

国家総動員法[3)]第1条では「国家総動員」の概念を「戦時(戦争に準する事変の場合を含み)に国防上の目的達成のために、国家の全力をもっとも有効に発揮するように人的・物的資源を統制運用」することだと規定した。第2条では総動員物資の範囲を①兵器・陥穽・弾薬・その他の軍用物資、②国家総動員上必要な衣服・食糧・飲み物・飼料、③輸送用・通信用・土木建築用物資、④原料・電力・機械器具・装置などその他の物資、⑤以外「勅令」で指定する国家総動員上必

2) 「強制動員」は「強制連行」「強制連行・強制労働」などと共に使われているのに、 一般的に日本がアジア太平洋戦争(1931～1945)を遂行するために施行した人的・物的動員を指す。「国家総動員法」制定以後本格的に実施された。動員地域は韓国、満洲国、中国、台湾、南サハルリン、ミャンマー、タイ、インドシナ、マレーシア、ボルネオ、ジャバ、ニューギニア、ミクロネシアなど、日本の植民地及び占領地・戦場だった。

3) 1938年4月公布して5月から施行した日本の戦時統制法で、中日戦争を起こした日帝が人的・物的資源を勝手に動員・統制する目的でつくった法だ。この法を根拠にして、戦時には労働力・物資・資金・施設・事業・物価・出版などを統制したし、平常には職業能力調査、機能者養成、物資備蓄などを命令した。日本の本土はもちろん、日帝強占期治下の韓半島とタイワン、満洲国にも適用されて、強制徴用、徴兵(徴兵は1943年に施行)、食糧供出など戦時統制体制が施行された。日帝敗亡後である1946年4月1日廃止された。

要な物資で規定した。第2条で規定した物資を生産・輸送するための人力が 「労務者」と「軍務員」という名前で動員された。

第3条の総動員の業務は物資の生産・流通・輸出入を含めて運輸・通信・金融・衛生・教育・研究・情報・宣伝など総動員上必要な業務に規定された。特に人的資源統制に関する内容は徴用(第4条)、国民協力(第5条)、労務統制(第6条)、争議統制(第7条)、従業員の共用(第13調第2項)、国民登録(第21条)、諸技能者の養成(22条)などだった。1943年以後、一層強化されて「全部動員」と呼ばれるまでに至った。4)

「夕方に寝ている時、急に労務(動員業務担当者)と私たち部落の里長に出なさいと言われて、強制に引かれて行った」彼らは郡や面の職員と警察署の高等係刑事などの引率の下に面事務所→郡庁→道庁所在地を経って、釜山港(一部は麗水や元山港)で関釜連絡船に上がった。下関等地に到着した彼らはまた列車で炭鉱や工場の作業現場に配置された。「子供の拳ぐらいのおにぎり二つ、何も入ってないネギ汁の半分」を食べて、5)厳重な監視の中で作業場から外への出入りが禁止されたまま、抑圧と差別の中で辛い生活を続けていくしかなかった。日本に強制動員された場合の一般的な姿である。

強制動員被害6)の真相を究明する作業は第一、強制動員犠牲者の遺骸の発掘・収拾・奉還、第二、1965年の韓日協定から除外された日本軍慰安婦・原爆・サハリン問題などの処理、第三、アジア・太平洋の全地域で恣行された事件・事故の真相(実態)調査、第四、厚生年金をはじめとした未収金の資料入手など日帝の加害事実を明らかにする事になると思う。

これを通じて日帝の苛酷行為と強制動員、軍慰安婦の被害、遺骨放置行為などが人類の普遍的な慣習と人道主義に反する重大な犯罪として、韓国だけでなく国際社会と世界に歴史的な事実と真相を正確に知らせて教訓にしようとするのだ。

「前へ行く車がのめれば、付いて行く車はこれを境界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前車覆、後車誡 /『漢書』 賈誼伝〕」、「先立って経験した痛みを返り見ることでこれから近付くかも知れない患難

4) 日本政府が公開した統計によると、強制動員になった韓国人は軍人230,002人、労務及び軍務員7,360,247人など総7,590,249人に至る。ここには従軍慰安婦など性動員者と満州地域に動員された韓国人労務動員者の数は含まれていない。重複動員の人員が含まれたことを勘案すれば、実際の人員は約300万人と推定される。

5) 「金東業証言」・「閔丙珠証言」、『どこへだって行けるか?憲兵が銃を持って守るのに』(強制動員口述記録集4), 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委員会, 2006、p.42·88。

6) ここでの「強制動員被害」というのは「満州事変以後太平洋戦争に至る時期に日帝によって強制動員された軍人・軍務員・労務者・従軍慰安婦などの生活を強要された者が受けた生命・身体・財産などの被害」を言う(「日帝強占下真相究明等に関する特別法」第2条第1項)。全体強制動員被害者の規模は延人員800万人と把握される。

をあらかじめ慎む〔予其懲而毖後患 / 『詩経』小毖篇〕」という言葉があるように「強制動員」という誤ったことが二度と繰り返されないように警戒すべきの記憶として畳み込むことで、被害真相究明作業の歴史的な意義と当為性を見つけると思う。

このように「過去は現在の鏡で、未来の里程標」になるからだ。私たちは過去の過ちを反省の鏡にして、正しくて正義のある未来の道に進むように努力してほしい。日帝強制占期の強制動員の被害真相を究明する事は歴史の真実を明らかにして、強制動員の犠牲者たちの苦痛を抱くことで国民和合に寄与できると思う。

## 3。東アジア共栄の先決課題で認識すべき

「国際人権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7]では、強制動員被害者に対する救護、抑留者の早速な帰還及び送還、遺骸の早速な送還、墓地の尊重、日常生活の回復は人間の基本的な権利であると同時に保護を受けるべき価値であること、強制動員による抑留・虐待・負傷・死亡・行方不明者に対する真相調査と遺骸の本国送還・安置は該当国家の基本的な責務として、このような責務をなおざりにする国家は国際社会の正常な一員になれないと明示している。

このような国際的な共感帯を基に、第2次世界大戦後、戦争勃発に対する謝罪と反省、被害者の補償などの内容とその意味に対して調べてみる。第2次世界大戦の「戦犯国」の一つであるドイツはナチと企業の行った戦争犯罪と強制労動に対して反省して、ヨーロッパの多くの国々と政府間の協定を通じて被害賠償努力を続けているし[8]、大統領・総理などが被害国の国民に向けて頻繁に心

7) 細い意味では交戦法規の中で特に、戦争犠牲者の保護を目的にする法規(ジュネーブ協定)、広い意味では個人の尊重を確保するためのすべての国際法規範を指す。1971年、国際赤十字委員会が召集した「武力紛争に適用される国際人道法の再確認と発展のための政府専門家会議」で最初に国際人権法という言葉が公式的に使われた。包括的な意味の国際人権法には平時において個人の人権と基本的な自由の保障を目標にする人権法と戦時において交戦国の行動の自由を限る交戦法規が全部含まれる。その中でも人間及び彼らに不可欠な財産を保護する規則だといえる。

8) 「連邦賠償法」を制定して現在まで、被害者別個人に賠償(1953)、ドイツ-イスラエル間ルクセンブルク協定締結(1952)、西ヨーロッパ12か国と両者間ナチ被害補償包括協定締結及び賠償(1959~64)、ロシア・ポーランドなど近隣諸国と平和条約を締結した(1990)。「記憶・責任そして未来(Erinnerung、Verantwortung、Zukunft)」財団を設立して(2000)、2003年現在、第2次世界大戦の戦争責任と関連して、総614億600万ユーロ(91兆8千億ウォン)を賠償した。この財団の主要業務は、第一、被害者生活支援・医療社会保険支援など支援業務、第二、強制労働被害に対する歴史的な研究及び教育支援(「強制労働アーカイブ1939~1945」運営)、第三、歴史教育を通じる人権意識の向上、第四、その外に

を込めて謝罪の意を表明している。

1988年、アメリカ議会は第2次世界大戦の当時、強制で隔離収容した日系アメリカ人たちに公式的に謝罪したし、2008年には下院で建国初期、奴隷制の施行に対する謝罪決議案を採択したし、2009年6月、上院でも同じ決議案を議決した。アメリカが国際社会でリーダーシップ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る背景の一つが過去史に対する省察と反省、そしてこれを基にした正しい進路設定を志向する国家の責任意識と実践にあることを注目する必要がある。同時にこれは過去の非人道主義的な行為に対して国際社会が一緒に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道徳的な責務を言い聞かせて、これを率先垂範することで、世界を善導する国家としての品格と道徳的な優越性を誇示しているのだ。9)

私たちと同じく第2次世界大戦期の強制動員被害国家であるイスラエルは1950年代から「ヤド・ヴァシェム(常設調査機構)」を設置して、ユダヤ人に対する強制収用、強制労動、資産没収、虐待とホロコーストなどに対する国家的な調査作業を推進して、犠牲者の追悼及び強制動員に関する研究・記録保存・教育のメッカで、世界的の名所として成長させた。10)

このように戦犯国家のみならず被害国家でさえ歴史的な過誤に対する責任・反省と共に、人道主義精神を実践しようと努力することと違って、加害国である日本はまだ植民地支配と強制動員の加害責任をま共に認めて反省する姿を見せていないことは実に残念である。

日本政府は1965年の韓日協定で論議されなかったサハリン、原爆被害に対して部分的な責任だけ認めて、日本政府自ら1965年請求権協定の当時、「全然論議されなかった」と認める厚生年金の脱退手当ての問題さえ、1945年当時の額面価を支給するしかないと言い、最近ある被害者に99円(いわゆる「99円事件」)を支給した。このように過去の過ちを隠して否定するのに汲々としている

---

強制労働の現場を保つ事業(強制収用所復元)などで、被害者に直接補償して、「加害の跡」を保って知らせることで、人権の大事なことを広く知らせることを財団の「責務」にしている。

9) これと共にJPAC(米の戦争捕虜・失踪者合同確認司令部)を設置して、第2次世界大戦以後韓国戦争・ベトナム戦争・イラク-アフガン戦争に至るまで、アメリカが海外に介入した戦争・紛争地域で死亡したり失踪した(8万3千人 推定)米軍・アメリカ人の遺骸を追跡・発掘・収拾・安置する任務を遂行している。そのために年間1億4千万~1億5千万ドル(約1千700億ウォン)の警備と450人の専門人力が動員されて「全世界に散らばっている遺骸を探して、アメリカで奉還して遺族に戻してくれる」という価値を掲げて、国家の責務遂行に忠実している。

10) 「ヤド・ヴァシェム(YadVashem)」はヘブライ語で「名前を記憶しなさい」という意味だ。1935年以後、第2次世界大戦んの時、ヒトラーとナチによって虐殺、犠牲になった約600万人のユダヤ人たちを追念して、全世界と人類に歴史的な教訓を残すために、1953年イスラエル国会が立法を推進した常設調査機構及び記念施設を指す総称だ。単純な追悼を越えてナチの残酷行為に対する被害事実と真相究明、記録保存、学術研究(Yad Vashem Studies)及び国際的な学術会の開催などの総合的な機能を常時的に推進している。10万余坪の施設の中に2005年「ホロコースト記念館」を建立するなど、持続的に施設と業務を強化拡大している。年間、数百万名の全世界からの観光客と研究者たちが訪問している。

ため、軍慰安婦の問題や731部隊の生体実験、その他の強制動員中の虐待・虐殺など各種の残虐行為などに対する責任を全面的に否認しているし、日本内の徴用者などの遺骨調査と送還にも消極的な立場を立て通しているのだ。

だからこそ、日本の「戦争責任」を否定しようとする保守右翼の勢力は「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委員会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員会」が強制動員の被害調査と遺骨奉還などの活動を展開していることに、負担や圧迫を感じ、いらいらしているようだ。

「私が強いからといって弱い者に暴悪にふるまってはいけないし、群れが多いからといって数の少ない人々を凌蔑してはいけない〔強不暴弱　衆不凌寡〕」という中国の諺は人間関係だけでなく、国際社会にも適用できる。過ちをおかした国家が力を前にして自分の過ちを認めないで被害国を圧迫・脅威する限り、国際社会の平和と公営は不可能だろう。

もちろん彼らとは違って、日本国会議員の中には「前後問題」解決のために努力する方が少なくない。1970年代以後、戦後補償研究会、戦後補償を思う議員連盟など研究団体が設立されて、法案発議及び研究活動を展開している。元々サハリン、原爆、シベリア捕虜などの日本人と係わった被害問題解決に対する必要で設立されて、韓国人被害問題を包括する研究団体にその範囲が拡がっている。これと共に民主党所属の議員を中心にした「恒久的な平和のための真相究明法成立の議員連盟」と。「慰安婦問題と南京事件の真実を検証する議員の集まり」などが活動している[11]。実に幸いな事で、日本政府及び保守右翼の勢力に対する批判と牽制活動に伴って、日本社会の良心的な市民団体との連帯活動を強化する必要がある。

最近韓・日両国の民間で活発に展開されている真相究明努力をみると、日帝強制動員の被害の中層的な性格(民族・階級・女性・平和・東アジアの未来問題)を基に、より次元の高い日帝強制動員被害問題の解決を志向して、日帝強制動員問題解決を通じて日本社会の反省を越えた東アジアの民主主義の定着及び平和共同体の構築を志向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12]

---

11) 日本内の良心的・親韓政治人(例、「戦後補償を考える議員連盟」)、専門家、市民団体(NPO)、宗教人(仏教界)などは、植民地被害国である韓国政府が強制動員被害調査と遺骨奉還、被害者支援のための法律を制定して政府機関として「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員会」を運営するのに対して「驚き、うらやましく、恥ずかしい気持」で、「韓国を見習って日本政府ももっと頑張って被害調査と遺骨奉還などに積極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告白している。

12) 特に、2010年「韓日強制併合100周年」を迎えて、強制動員被害の真相究明活動と関連して推進された主要な事実では、日本政府が韓国政府(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員会)に労務者供託金文書の副本を伝達したし(4.5)、岡田克也日本外相が記者会見で、「韓国民族の自負心に傷付けたこと」を謝ったし(4.19)、第4次、祐天寺に保管していた韓国人軍人・軍属の遺骨奉還追悼式(韓・日の政府間公式行事)に初めて岡田克也外相が参席して、追悼の辞を朗読した(5.17)。韓・日両国知識人、「1910年強制併合条約無効」

向後、このような韓・日両国の市民社会及び知識人間の連帯を韓・中・日3国の政界・学界・法曹界・市民団体・宗教界・言論界などの力量を結集する次元に拡大して、窮極的には東北アジアの平和共同体の構築を目標にする組織体の設立につなが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これは真相究明作業の活性化及び発展にも大きく寄与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う。13)

そしてこのような努力が窮極的に日本の国家利益に符合できるということを認識させる必要がある。世界経済の中心軸が東北アジアに移動しているし、自由民主主義と共産主義の間の体制競争の最前線になっている韓半島の地政学的な条件を勘案すると、日本の過去使の反省と責任のある行動が韓日関係の進展を見積る方向舵になるはずであり、これは日本の国益にも直結するはずだと認知する必要がある。

それと共に中・日間の政治的な葛藤と領土紛争などの懸案解決の過程で、日本の主張が国際的な説得力と共感を確保するためでも、日本の自浄能力を取り揃えて、正義と真実を尊重する国家であることを実践的に見せてくれないとならない。

このように韓・日関係の過去と現在は単に両国だけの問題ではなく、中国と台湾、ロシアと東南アジアなど日本の侵略戦争の関連国とも密接な関係がある。したがって、過去使に対する日本政府の前向きな努力は東アジア国際秩序の向方とも連関のある問題になるわけだ。

要するに韓・中・日三つの国の間の経済的・文化的・社会的な統合と同伴・発展を志向する新しい東北アジアの地域秩序の確立のためでも、障害物として残っている強制動員被害の真相究明と謝罪・反省及び補償の措置が速かに成り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要旨だ。

---

宣言(6.10)、大韓弁護士協会と日本弁護士連合会の対日過去清算問題と関連する共同立場採択(6.21)、「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員会」で、「未来指向的な韓日関係方案」を樹立したし(6.21)、また仙谷由人日本官房長官が個人請求権消滅問題、韓半島出身強制動員者遺骨返還、在韓原爆者、文化財返還の問題に対する解決意志を表明したし(7.7)、三菱重工業(株)で朝鮮女子勤労挺身隊の問題に対する協議に同意するという回申文を発送した(7.14)。菅直人日本首相が「韓日強制併合100年談話」で、サハリン居住の韓国人支援、韓半島出身者の遺骨奉還支援、文化財引き渡しなどについて言及した(8.10)。日本共同通信が戦時体制期の郵便貯金の存在事実を伝えた。(8.18)。日本政府から韓国政府(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員会)に「労務動員者死亡紀録(埋火葬認許証)」5,600枚を渡したし(8.26)、学界を含んだ韓日市民団体が共同で「1910年強制併合条約の無効」を宣言した(8.29)。李明洙議員(自由先進党)が「日本強制動員ネットウオーク'及び'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員会」と共同で地域内の被害者の実態について共同調査を実施する(9.8)などの活動が展開した。このような関心と熱情を土台に両国学者及び市民たちが参与した「日帝強制動員&平和研究会」が出帆するに至った(2011.8.6.)。

13) このためには真正性を前提とした強制動員被害者に対する日本政府及び企業の努力、強制動員犠牲者遺骨調査及び奉還、サハリン・ハンセン病の患者・シベリア捕虜・BC級戦犯問題解決、教科書問題解決、地方自治体の調査活動の活性化が要求される。

## 4。国家が国民の痼を解いてくれるべき14)

「国家の存在理由は何ですか。国民を守ることができないのが何の国家ですか。彼らが引っ張られる時には国がなくなってそうなったし、祖国が解放されて国ができた時には国力がなくて仕方がなかったとしましょう。するが、今は何ですか。世界10代経済大国だと、それで他人を助けると大きい声を出す事ではないですか。家では、自分の父母兄弟も知らないふりをするくせに、家を出ては、他人を助けると大げさに言う拙夫たちの行態と何が違いますか15)。」

強制動員被害者の子孫の怒り混じった歎息だ。国権喪失で国民を保護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家の責務を遂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亡国と殖民支配の歴史」を持った韓国近代史の痛みをよく現わしている。強制動員被害の傷がいつの間にか私たちの胸三寸に怒りと悔恨の塊になっているのだ。

このような傷と記憶を撫でて治癒することは、すぐ社会統合と国家発展の礎石を確かめることになるはずだ。国家が国民の痛みと一緒に、その傷を治癒してくれるために努力する時、はじめて自分の祖国を愛して、国家のために喜んで献身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考えを持った国民に生まれ変われるはずだ。私たちが強制動員被害の真実を糺して補償してくれ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がすぐここにあるのだ。

進んで先祖の犠牲を称えて、うちの手でその痛みを慰めて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趣旨から始まった政府次元の強制動員被害究明事業と犠牲者に対する支援事業は国家の成熟度と品格を見せるいい例になれる。また、被害当事国が加害当事国との和解を導くという事実がどのぐらい成熟した姿なのか。ここで真の「国格」の様子も発見することができるはずだ。16)

それでは、向後被害真相究明の作業はどんな方向へ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なのか。

先に、加害国である日本に歴史的な責任と反省を促すのはもちろん、正確な歴史認識にもとした日本市民社会を含んだ良心的な勢力との大乗的な次元の和解・交流・協力活動を主導的に企画して執行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と責任を取り備えた政府次元の機構が主導的に推進して行かなければ

---

14) 2010.3.22制定施行された「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に関する特別法」(法律第10143号)第1条でも「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の真相を究明して、歴史の真実を明らかにして1965年に締結された「大韓民国と日本国間の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と経済協力に関する協定」と関連して、国家が太平洋戦争前後国外強制動員犠牲者とその遺族などに人道的な次元で慰労金などを支援することによって、彼らの苦痛を治癒して、国民和合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にする」と言った。

15) 柳淵象(サハリン強制徴用犠牲者遺族、前 韓独薬品理事)、「サハリン同胞には祖国がなかったんです」、『ニュースレター』29号、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など支援委員会、2011。

16) 韓相祷、「詩論:強制動員真相究明作業、'国格'の問題だ」、『中央日報』2010年1月30日。

ならないはずだ。

併せて日帝による被害歴史を共有して、遺骸発掘・奉還事業に直結した中国及びロシアなど周辺国家との外交的な次元の協調、韓民族共同体としての北朝鮮との対日共助及び統一後歴史問題解決などのための協調必要性などの課題を想定する場合、国家的な次元の'歴史立て直す'作業の一環として、政府が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するはずだ。

1965年韓日会談請求権協定締結時、従軍慰安婦・サハリン・原爆・厚生年金脱退手当などの問題は排除された。この中でサハリン・原爆問題に対しては最近日本政府が永住帰国事業、原爆被害者手帳発給及び慰労金・治療費支援などを推進しているが、'その内容と支援規模がまだ不十分だ'という指摘だ。

日本政府とうちの外交当局は、1965年の韓日請求権協定ですべてが解決されたという方針を固守するし、依然日本従軍慰安婦のお祖母さん達の叫びに背を向けている。

また、サハリン地域強制動員被害者問題と原爆被害者問題、韓半島内の強制動員被害問題、シベリア捕虜の問題に対する調査と究明作業が要求されるし、労務者供託金文書外に厚生年金名簿や郵便貯金資料など、1965年、請求権協定に含まれない問題に対する再論議やはり必要だ。相変わらず解けない、そして早め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民の請願性課題が積もっているわけだ。

2011年8月30日、憲法裁判所は「政府が日本軍の従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日本側と積極的な外交措置を取らないのは違憲」と判決した。私たちの政府も日本政府を相手で未決・保留・未完の課題を協議して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責任で自由ではないという意味で、政府次元の積極的な接近が要求されると促しているのだ。

これから予想される日本政府との外交的な協商のためには、強制動員被害者の実態と被害事実を立証する資料の提示と、その論理的な根拠を設けることが重要なはずなところ、今推進されてい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の作業を通じる被害調査及び真相調査の結果が大きく寄与することができるはずだ。

これと共に真相究明作業が進展すれば、日本政府の資料提供拒否及び隠匿試みも強化されることと類推される。そして、これによる資料の消滅可能性と関連生存者の高齢化及び死亡率が険しく上昇する現実などを勘案すれば、被害真相調査業務の講話と拡大がさらに必要な実情だ。

それで、政府は日本政府を相手に真相調査、遺骨奉還、未収金など関連資料要求、基金還収問題協議時、戦略的な交渉力を発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これのために強制動員被害事案別真相調査、遺骨の身元・遺族確認、遺骨奉還、国内追悼施設管理などを総体的に管理・維持

して行ける組織と関連法規を設けて、これを総合的に企画・執行することに責任がある調整機関が必要だという点を換気しておこうとする。

終わりに、指摘しようとするのは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作業の基盤として学芸・研究機能の重要性を見逃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点だ。現在、政府が推進してい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の作業は、世界の歴史上の由来がないことだ。中国に731部隊や南京大虐殺の現場に記念館などが建てられることはしたが、被害調査で遺骨奉還、被害者救済と支援、違令事業と市民教育に至るまで、総体的に専担する常設機具はない。

今、建設している歴史館は、強制動員被害と言う過去の痛い記憶を踏んで、韓･日両国民及び東アジアすべての民族が一緒に共存・公営の未来を設計して論議する空間として役目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これと共に、植民地時期及び激動の韓国近現代史に対する関心と理解が乏しい次世代を対象にした市民教育を通じて、東アジアに反戦と平和認識を拡散することも決して怠れない。歴史館と史料館・研究センターは、学者らにだけ必要な空間ではない。被害者と遺族らの「治癒の空間」と同時に孫らには「未来に向ける窓」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

過去と現在、そして未来が決して断絶した時期ではなくて、過去の結果で今日があって、また今日が明日の始めと原因になっていることを悟れれば、なぜ私たちが強制動員被害の真相を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かに対する理解にも届けるはずだ。

このような被害真相究明の作業を通じる国家・国民的な次元の関心向上と歴史認識の高揚は、客観的で科学的な学問の研究結果に基づか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真実ほど重くて峻厳な審判はない事で、真実は調査と研究を通じて明らかになれるはずだ。

これと共に対日抗争期国外強制動員被害調査及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員会で所蔵している関連資料の価値に対する認識も拡散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一例で被害者名簿は、量的な側面で国内所長機関はもちろん世界的に一番多く収集・保管している点にも意味があるが、強制動員被害当事者らの涙とため息がしみこんでいる一次使料という点を最高で挙げ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その間の熱誠的な調査・発掘・収集作業を通じて、たんすや倉庫の中で深く眠った資料を世の中の外に引っ張り出した結果だ。17)

このような一次資料を基に、専門研究者として職員らの愛着と熱情が加わったので、その間の真

17)鄭惠瓊、『日本帝国と朝鮮人労務者の供出: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研究2』、先人出版社、2011、p.406-407。

相究明作業もその意味と価値を評価されることができたと言う。

一両日中に偉容を表わす、歴史観・資料館・研究センターなどの施設空間が未来の韓・日関係と「東アジア共同体」時代に戦略的な総本山に役目ができるためには調査・研究・刊行・戦時関連などソフトウェア分野の専門力量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という点を留意してくれて欲しい。

# 대일과거 청산, 시효란 없다

## - 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 -

국회의원 이명수(선진통일당, 충남 아산)

## 1. 머리말 - 대일과거청산의 현재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동원되었던 피해자 8명이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존의 원고 패소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초의 승소 취지 판결이다. 또한 그간 일본 법원이 일관되게 내린, 일본이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해 자행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보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1년 9월에 대일항쟁기 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 발표한 전범기업 명단에 의하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일본은 물론, 한반도와 사할린, 동남아시아 등지에 각각 21개소와 15개소의 작업장을 운영했다. 특히 일본제철은 한반도에 청진제철소를 비롯해 3개 작업장을 운영했다. 일본제철이 자본을 투자해 만든 계열회사에서는 한반도에 탄·광산을 49개소 운영했다. 현재 확인된 한반도 내 일본제철 계열 소속 작업장 사망자 19명 가운데에는 13세에 동원된 경우도 있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가혹한 노역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판결을 통해 전범기업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단죄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낸 성명서의 첫 문장은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왔다."였다.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의 판결은 피해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 얼마나 기다렸던 판결인가.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은 여전히 멀다. 2000년 5월 부산고법에서 시작한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사건을 재심리하게 되므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한일강제병합 102년과 해방 67년을 맞은 오늘날 대일과거청산의 모습이다. 대일항쟁기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국가 권력에 의해 동원된 한국인은 중복인원을 포함해 75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일본과 사할린, 중국 만주, 동남아시아 등지로 동원되어 노무자와 군인, 군무원으로 강제노역에 종사해야 했고, 전투에서 총알받이가 되어야 했다. 한반도의 민중들은 광산과 군수공장, 들판에서 석탄과 광석, 군수물자를 생산해서 공출을 했고, 식량과 일용품마저 빼앗겼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어린 소녀들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군인들의 성적 도구가 되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일본은 패전 이후 지금까지 전쟁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는 커녕, 명백한 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제동원은 없었다'거나 '위안부는 자발적인 돈벌이였다'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이 저지른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인해 입은 한국인의 고통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의 벽은 견고하다. 10대 초반에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근로정신대 소녀들은 이제 90을 바라보는 고령이 되었으나 여전히 외로운 외침을 계속할 뿐이다. 5.24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모두 해결되었다'이다.

반인륜적 범죄인 위안부 피해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더욱 심각하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문제를 해결해보자는 한국의 요구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 세운 소녀상의 철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미국의 기림비 설립을 방해하는 등, 오히려 역사적 책임과 역행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해국인 일본이 가해국으로서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국이 피해국답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청산하지 못했다고 하여 포기할 수는 없다.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고 하여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족문제는 배상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5.24 대법원 판결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유족의 연령도 이미 70대에 접어들

었다. 더 이상 이들의 가슴에 진 멍에를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를 위해 대일과거청산 문제에 대해 그동안 한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냉정히 평가하고 향후 역할과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5.24 대법원 판결이후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실천 방안을 각국의 저명한 연구자 및 실천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다.

## 2. 한국의 정부 기구를 통한 대일과거청산

1960년대 이후 일본은 원폭피해를 내세워 전쟁범죄를 저지른 가해국이 아닌 전쟁피해국으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도쿄나 오사카 등 일본 본토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을 들어 민간인들의 피해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한다. 가해국 일본이 이같이 피해자의 탈을 쓰고 전쟁피해에 대해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피해국인 한국 정부는 어떠한 대응을 했는가.

이 점에서는 한국 정부도 당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힘든 투쟁을 계속하고 있을 때, 한국 정부나 국회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진다.

더구나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동원되어 고초를 겪은 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으로 일본에서 아무 것도 살 수 없는 99엔을 지급받는 모욕을 당했음에도 지난 5월 18일 한국의 공공기관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손을 잡고 아리랑 3호를 발사했다.

발표자는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입법 활동에 나섰다. 최소한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채 도리어 한국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해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2010년 8월에 이들 기업의 입찰제한을 명시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국회 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WTO법에 저촉된다는 점이 확인되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WTO정부조달협정상 개방 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7개 중앙부처, 전국기초자치단체, 교육청과 초중고교, 263개 공공 기관 등에서 과거사 미청산 일본기업에 대한 국가발주 입찰을 제한해 불이익을 주기로' 합의했다.

발표자는 이러한 합의가 실효성을 띄게 하기 위해 연구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일본전범기업 명단 선정 작업'에 들어가 2011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전범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또한 그 후속 조치로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함께 전범기업 입찰제한 지킴이 활동도 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010년 7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협상에 응하여 현재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지원단'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협상은 한일 시민단체가 한국 국회와 힘을 합해 거둔 작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이웃나라 중국이 거둔 성과와 비교해보면 초라하다. 이미 중국은 전범기업의 입찰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힘입어 2010년에는 일본 전범기업 니시마쓰(西松)건설이 중국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화해금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조금이나마 면피를 할 수 있는 것은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설립해 피해조사를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피해국이 피해자와 시민의 힘으로 정부 기관을 설립하고 진상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례이다. 전쟁범죄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한일 양국 사회에 반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고통을 겪은 동아시아가 평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그 활동도 올 연말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위원회는 2004년 11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로 출발하였으나 한시기구였으므로 불안정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적은 인원과 부족한 예산 등의 어려움은 물론, 2009년에는 존폐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평소 '민족문제는 배상시효가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던 발표자는 당시 대일과거청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진상규명활동을 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운영 기간 및 업무내용이 축소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어 2010년 4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2010년 말부터 이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내용의 개정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쉽게도 18대 국회의 폐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

위원회는 그간 총 8년간 운영되었지만 1~2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인력과 예산도 충분하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2만건에 달하는 피해조사를 완료했고, 위로금 지급 업무와 진상조사, 자료 발굴, 유해수습봉환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렇다면 이로써 피해국인 한국은 모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완수한 것인가. 대일항쟁기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국가 권력에 의해 동원된 연인원 750여만명에 달하는 한국인 피해자 가운데 1차적인 피해조사를 완료한 비율은 약 5%에 그치고 있다.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상금은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사망하거나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는 30여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유해봉환은 400여위에 불과하다. 사할린과 같이 50여개 공동묘지를 뒤져봐야 하는 경우가 있고, 중국 해남도나 일본 홋카이도 등 유해의 존재를 알면서 발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부친의 사망기록이라도 찾고자 날마다 의원회관으로 위원회로 애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는 사할린 국내유족들의 소박한 바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3. 대일과거청산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과제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과제는 과제로 남겨서는 안 되는 과업이다. 해방 7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에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구히 미해결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역사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이 이 과제를 해결해주기도 만무하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동포들이 겪은 고통을 풀어주어야 한다.

발표자가 이미 작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급재판 전국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대일과거청산은 단지 한국이 일본을 추궁하고 단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사과와 보상은 평화와 화해로 가는 지름길이자 상생(相生)의 길이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시급한 과제로써 안정적인 위원회의 운영이다. 위원회는 미해결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물론, 기존에 이룩한 성과가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의 존립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진상규명작업이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국의 위원회는 전쟁

을 일으켜 많은 민간인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곳이다. 위원회가 없어진다면, 일본 정부는 지금보다 더 큰 목소리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외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전범기업들은 당당해질 것이며, 힘없는 피해자와 유족들은 호소할 곳을 잃게 되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되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렵게 설립하여 운영 중인 정부기관이 이들 과제를 풀어가도록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국회가 해야 할 과제로서 현재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한반도 동원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 활동이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히구치 유이치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장께서 이미 노작을 통해 규명하셨고, 한국 언론을 통해 지원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신 바 있다. 한반도 동원피해자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4건(일본군위안부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사할린 문제, 한반도 피동원자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 가운데 한반도 피동원자를 제외한 다른 3건은 이미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은 한반도 피동원자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국회와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입찰제한을 지키도록 하는 상시적인 '지킴이' 역할이다. 전범기업명단 발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입찰제한이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여전히 공공기관의 입찰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입찰을 제한하고, 제한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하고 촉구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입찰제한의 필요성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

## 4. 맺음말,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일부 정치가들은 이제 과거 어두웠던 일은 덮고 미래로 가자고 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고도 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로 '모두 완전하게' 끝났다고 한다.

그럼 모두 해결되었는가. 해결되지 못했다. 국민 대다수도 여전히 한일간 민족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생존하고 계시는 피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

명하고 있다.

대일과거청산은 현재 진행형인 미해결 과제이다. 과거를 덮고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다. 100년 전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수백만명의 우리 동포가 전쟁터로 군수공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다. 이제는 한국이 아시아의 평화를 다지는 초석으로서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한민족은 식민지와 침략전쟁의 아픔을 겪은 민족이기에 아시아의 민중들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에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선도(先導)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거울이라고 한다. 역사라는 거울을 잘 닦아서 후손들이 비춰볼 수 있도록 넘겨주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 마련된 고민의 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전쟁의 아픔을 겪은 관계국 관련자들의 지혜가 모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 対日過去清算、時効とは得ない

## - アジア平和のための韓国政府の役割 -

李明洙(先進統一党議員、忠南牙山)

## 1。序文 - 対日過去清算の現在

2012年5月24日韓国の最高裁判所は歴史的な判決を下した。三菱中工業と日本製鉄へ動員された被害者8人が出した損害賠償などの請求訴訟の上告審で既存の原告敗訴原審を破棄して原告勝訴判決下したのだ。これは日本企業を相手として損害賠償を請求する訴訟の中で初めて勝訴の判決である。また、日本の裁判所がこれまで同じく判決した、日本が韓半島や韓国人に振舞った植民地支配が合法的であり、1965年の韓日請求権協定ですべての補償問題は解決できたという判決をひっくり返した。裁判所の賢明な判断に敬意を表せざるを得ない。去る2011年9月対日抗争期委員会の調査結果をもとで、発表者が記者会見で発表した戦犯企業名簿によると、三菱中工業や日本製鉄は日本はもちろん韓半島やサハリン、東南アジアなどに各21箇所や15箇所の作業場を運営した。特に日本製鉄は韓半島の清津製鉄所をはじめ三つの作業場を運営した。日本製鉄が資本を投資して建てた系列会社は韓半島で炭鉱山が49箇所があった。現在確認された韓半島内の日本製鉄系作業場で死亡した19人の中には13歳の未成年者も動員された事があり、過酷な労役の事例が確認できた。

この判決で戦犯企業の非人道的な行為に対する断罪が可能になると思う。「勤労挺身隊ハルモニと共にする市民会」が出した声明書の最初の文章は「とうとう待ち焦がれた日が来た」であった。戦犯企業を対象にした最高裁判所の判決は被害者には日照りに降る雨のようだった。どれほど願っていた判決であるか。しかし、これから進む道もまだまだ遠い。2000年5月釜山高等裁判所で

始まった訴訟は最高裁判所の判決を通じて再び事件を審理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のでいつ終わるかはわからないものだ。これがまさしく日韓強制併合102年と終戦67年を迎えた今日の対日過去清算の様子だ。対日抗争期委員会の調査によると、日本国によって動員された韓国人は重複動員された人を含めて弱750万人に至ると知られている。彼らは日本やサハリン、満州、東南アジアなどに動員され、労務者や軍人、軍務員として強制労役に従うしかできなかった。戦場では盾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韓半島の民衆は鉱山や軍需工場、野原から石炭と鉱石、軍需物資などを生産したが、これらも供出され、食糧や日用品まで奪われた。何十万人の少女たちは「慰安婦」という名で軍人たちの性的道具になって洗われない傷を受けた。

日本は終戦から今まで戦争被害について国としての調査どころか、明白な事実さえも認めていない。むしろ、「強制動員はなかった」とか「慰安婦は自発的な稼ぎだった」という妄言を繰り返している。日本が起こしたアジア太平洋戦争で被害を受けた韓半島人の苦痛に対する日本国と企業の壁は堅固である。10代の初ごろで軍需工場に動員された勤労挺身隊の少女たちはもう90才に手が届く高齢になったが、相変わらず孤独な叫びを続けているだけだ。5.24.韓国の最高裁判所の判決に対しても日本政府の公式的な反応は「すべて解決した」というのだ。

反人倫的な犯罪である慰安婦被害問題に関する日本の反応はもっと深刻だ。日本は慰安婦問題を解決しようという韓国の要求をそむけるばかりではなく、韓国地に建てた「少女像」の撤去を公式的に求めているし、米国で建てようとする追悼碑に対しても妨害するなど、かえって歴史的な責任と逆行する態度をとっている。

理由は何であろうか。加害国の日本は加害国としての責任を認識していないし、被害国は堂々と要求していないからだと思う。

70年近くの間、清算しなかったといっても諦めることはできない。韓日請求権協定を締結したとはいえ、強制動員被害者に対するすべての責任がなくなったわけではない。民族問題は賠償時効がないからである。5.24.最高裁判所の判決がこれを証明している。

もう強制動員被害を受けた生存者を探すのは容易ものではなくなった。遺族の年齢も70代になってしまった。これ以上彼らの胸に残っている恨(ハン)をそのままおいておくにはいけないと思う。これのためにも対日過去清算問題についてその間韓国政府が注いだ努力を冷静に評価し、今後の役割や方向を提示しようと思う。特に5.24.最高裁判所の判決の以降、韓国政府がすべきのことについて具体的で実効的な実践法案を各国の著名な研究者及び実践家たちと一緒に工夫してみたい。

## 2。韓国の政府器具を通じる対日過去清算

1960年代以降、日本は原爆被害を知らせながら戦争犯罪を起こした加害国ではなく被害国に変身し始めた。この頃は東京や大阪などの本州にあった連合軍の空襲で被害を受けた民間人のことも言い始めるようになった。加害国の日本がこういう被害者の仮面を被って戦争被害に知らんぷりをしている中、被害国の韓国政府はどういう対応をしたのか。

この点では韓国政府も堂々だとはいえないと思う。その間、被害者たちが日本政府と企業を相手にしんどい戦いを続けている中、韓国政府や国会はどれだけ関心を持っていたかを考えると、恥ずかしくなる。

しかも、三菱中工業に強制動員された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たちは若いごろ動員されて苦労した給料なども全然もらっていないのに、厚生年金脱退手当は日本でも何も買えない99円をもらう侮辱をされた。でも、去る5月18日、韓国の公共機関は三菱中工業と手を握って「アリラン3号」を発射した。

発表者はこういう不当な状況を解決するため、小さな力でも役に立つよう入法活動に取り組んでいた。少なくとも、戦犯企業が強制動員被害者に公式的なお詫びや賠償もないまま、韓国の国家事業の入札に参加してもっと多い利益をとるのは防ぐべきだと思った。それで、2010年8月にこれらの企業の入札制限を明示した「国家契約法」改正案を発議した。「国家契約法」改正案は国会財政委員会の審議過程でWTO法も触れることが確認され、所管部処の企画財政とを協議をして「WTO政府調達協定上開放対象公共機関ではない7ヵ所である中央部処、全国基礎自治体、教育庁や小中高交、263ヵ所公共機関などでは過去史を未清算した日本企業の国家発注入札に制限をし、不利益をあたえるよう」と合議した。

発表者はこういう合議が実効性を持つよう、研究者たちや市民団体の活動家と一緒に「日本戦犯企業名簿選定作業」に入り、2011年は二回にわたって「日本戦犯企業名簿」を発表した。また、その後の措置として、「勤労挺身隊おハルモニと共にする市民会」と一緒に戦犯企業入札制限を守る活動もしている。

三菱中工業は2010年7月、勤労挺身隊ハルモニの被害補償のための協商に応じて、現在「名古屋三菱勤労挺身隊おばあさん支援団」と協商を進んでいる。これは日韓の市民団体と韓国国会が力を合わせて果たした小さな成果だと思う。

しかし、これらの努力はとなりの中国の成果に比べるとしがない。中国はすでに戦犯企業の入札を禁止しているし、政府の強力な対応に負って、2010年には日本戦犯企業の西松建設は中国被害

者や家族たちに公開謝罪をし、和解金を支給した。

それでも、被害国の韓国政府が少しでも免れるのは政府機関として委員会を設立し被害調査をしているのである。委員会は被害国なのに被害者と市民の力で政府機関を設立し、真相調査をするのは世界で唯一な事例であって、それが委員会である。この機関は戦争犯罪に対する真実な究明を通じて韓日両国に反戦平和の大事さを知らせたし、共に苦痛を経験した東アジアが平和の道を歩くように先駆的な役割をしたということで意味深い。

それなのに、その活動も今年の年末で閉めるところに置いた。委員会は2004年11月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委員会から出発したが、限時機構だったので不安定な状態で運営してきた。少ない人数と不足な予算などの難きはもちろん2009年には存廃の危機に置かれたこともあった。

普段、「民族問題には賠償時効がない」という信念を持っていた発表者は当時、対日過去清算問題の深刻性を感じて、委員会が安定的に真相究明活動をするように法案を発議した。発議法案は国会審議の過程の中で運営期間及び業務内容が縮小された内容で通過になって2010年4月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など支援委員会が発足するようになった。2010年末からこの法案の問題を補完する内容の改正法案を発議したけれども、残念ながら18代国会の閉会と共に法案は自動廃棄された。

委員会は8年間運営されていたが、1~2年間の期間で延長する方式で運営になったので、業務が安定的に行われなかった。人力と予算も十分ではなかった。きつい状況のなかでも22万件に至る被害調査を完了したし、慰労金の支給業務や真相調査、資料発掘、遺骸収拾奉還の業務を行われてきた。

これだけで被害国である韓国はすべての強制動員被害に対する真相究明を完遂したといえるのか。対日抗争期委員会の調査結果によると、日本国の権力によって動員された韓半島人は延べ人員750余万人にいたって、そのなかで１次的に被害調査を完了した割合は弱５％にしかできていない。彼らがもらうべきの補償金は支援金という名で一部だけ適用されている。日本が起こした戦争でなくなったり、帰ってこない被害者は３０余万人に至っているのに、遺骸奉還は400余位に過ぎない。サハリンのように50ヶ所の共同墓地を探さ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もあるし、中国海南島とか北海道のように遺骸の存在がわかっていても発掘できないもったいない場合もある。父親の死亡記録でも探そうと毎日議員会館や委員会を切ない足跡を止めないサハリン国内遺族たちの素朴な願いもかなっていないのである。

## ３。対日過去清算をため韓国政府がするべきの課題

先ほど話した課題は課題のままで残ってはいけない課業である。終戦70年が近くになっている今日でも解決できないと永遠に未解決な課題で残るしかならないからである。しかし、歴史的な責任を否定している日本がこの課題を解決してくれるとは考えられないと思う。私たちの力で同胞たちが経験した苦痛を解してあげなけらばないと思う。

発表者が昨年11月東京で行われた「強制動員・企業責任追給裁判全国ネットワーク」で発表したのように、対日過去清算はただ韓国が日本を追窮し断罪しようというのではない。真のお詫びや補償は平和と和解へ行く近道でながら共存する道である。これらのために実践する課題は大きく三つに分けられる思う。

第1は、一番至急な問題として委員会の安定的な運営である。委員会はまだ解決していない課題を修行するために、また今まで成し遂げた成果を無駄にさせないためにも必要だと思う。それに、委員会の存立は韓国だけの問題ではない。日本の自治体や市民団体がしている真相究明作業が続けられるためにも必要である。韓国の委員会は戦争を起こして大勢の人に苦しみを経験させた日本政府がやるべきの仕事をしているところだ。委員会がなくなると日本は今よりももっと大きな声で「強制動員はなかった」と主張するし、被害者に対する謝罪を拒否している戦犯企業はもっと堂々たる態度をする、弱者である被害者と遺族たちは訴えるところがなくなってしまう、歴史の車輪は逆行することもありえると思う。それで、苦労して設立し、運営中だった政府機関がこれらの課題を解すよう力を与えるべきだと思う。

第2は国会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現在の法案に含まれていない韓半島の動員被害者に対する支援ができるように立法活動である。この問題はここに参加した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会長の樋口雄一先生が労作を通じても究明しているし、韓国のマスコミで彼らも支援金の対象にするべきだと話したことがある。韓半島で動員された被害者の補償問題は1965年韓日請求権協定締結の時、論議に含めなかった4件（日本軍慰安婦問題、原爆被害者問題、サハリン問題、韓半島被動員問題）のなかで一つである。この4件の中で韓半島からの被動員者を除いた、ほかの3件はもう韓国政府が支援をしている。それで、韓半島から動員された被害者についても当然支援の対象になるべきだと思う。

第３は国会と政府はもちろん、市民社会も一緒にすることだ。韓国の政府と企業が入札制限を守れるよう常に「守り」をすることだ。戦犯企業名簿の発表はとても肝心なことだ。しかし、入札制限

は強制条項ではないので、相変わらず公共機関の入札は続けている。入札を制限し、それができない企業に対しては社会的に責任を取るよう進めたり促すような努力が必要だ。市民社会に入札制限の必要性を知らせ、一緒に参加することを求めることも続けるべきだ。

## 4。終わりに、東アジアの平和をため

韓国と日本での一部政治家たちはこれから暗い過去のことは覆って未来の方へ行こうという。過去には縛られないようにしようという。1965年韓日請求権協定締結で「すべて完全に」終わったという。

本当にすべて解決したのだろうか。解決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国民のほとんども依然として韓日間の民族問題は解決できていないと思っている。今も生存している被害者や遺族がこれを証明している。

対日過去清算は現在進行形で未解決の課題である。過去を覆って未来に行くことはできない。100年前、韓国は日本の植民地になって数百万人の同胞たちが戦場や軍需工場に追い出されるのを眺めることしかできなかった。しかし、これからは韓国がアジアの平和を固める礎石としての役割を果たす時が来た。韓民族は植民地や侵略戦争の痛みを経験したのでアジア民衆たちが戦争がない平和な社会で未来を描くよう先導できるからだ。

歴史は鏡だという。歴史という鏡をよく拭いて子孫たちが照らしてみるように引き渡すための工夫が必要だ。今日、ここに設けた悩みの場で韓国や日本はもちろん、戦争の辛さを味わった関係国の関連者たちの知恵がまとまれると期待する。

# 한국 지방정부 차원의 일제강제동원피해 지원 사례와 향후 과제

## - 광주광역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김선호(광주광역시 교육의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고문)

## 1.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란?

### 1)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상급학교에도 갈 수 있다”

양금덕(84. 광주광역시) 할머니가 당시 일본인 교사와 교장의 거짓말에 의해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것은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 5월경. 패색이 짙어진 일제는 전시 노동력 조달을 위해 13세, 14세의 어린 초등학교 또래 소녀들까지 그 희생양으로 삼았다.

당시 전남 나주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인 교장과 담임선생으로부터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고, 돈도 벌수 있다”며 일본에 갈 것을 권유받았다. 배고픈 시절,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제안은 배움에 목마른 어린 소녀들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동원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사 일을 돕고 있던 13~15세의 어린 소녀들이었다. 심지어 12살 어린 아이들까지 있었다. 목적은 일제의 전시 노동력 조달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었다. 일찍부터 일본어 교육을 강요받은 초등학교 재학생이나 초등학교 학력을 이수한 사람

들이 적절했던 것이다.

목포, 나주, 광주, 순천, 여수 등 전남지역 5개 도시에서 동원된 이들은 여수에서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에 도착한 뒤, 이어 대표적 공업도시인 나고야의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배치됐다. 그리고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굶주림과 혹독한 감시 속에 하루 8~10시간 동안의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나고야는 일본 최대의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던 지역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은 당시 군용 항공기(정찰기)를 이곳에서 제작하고 있었다. 양 할머니와 같이,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된 사람은 광주・전남에서 150여명으로, 당시 충남 지역에서 동원된 사람 150여명을 포함, 약 300여명에 가까운 어린 소녀들이 인력 수탈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군수공장에서의 노동은 혹독했다. 불과 13~15세의 어린 소녀들에게 육중한 선반, 비행기 기체 등이 몸에 맞을 리 없었다. 키가 닿지 않아 사과궤짝을 놓고 그 위에 위태롭게 서서 페인트칠을 해야 했으며, 찬 겨울 장갑하나 없이 맨손으로 철판을 만지고 찬물에 부품을 씻느라 손등은 퉁퉁 붓고 갈라져 있었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강요된 할당량 때문에 그만큼 부상도 많았다. 김성주(84. 경기도 안양시) 할머니의 경우 선반 작업 중 사고로 손가락이 잘리기도 했다.

특히 배고픔이 문제였다. 반찬이라고는 된장국이나 단무지 한 쪽이 전부였다. 허기를 견디다 못한 소녀들은 물로 헛배를 채우기도 했고, 심지어 길가에 이름 모를 잡초를 뜯어 허기를 달래기까지 했다.

1944년 12월 7일 정오 무렵, 도난카이(東南海) 대지진이 나고야 일대를 강타했다. 나고야 미쓰비시 공장도 예외가 아니었고, 일본인을 포함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출신 6명의 소녀들이 건물더미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1945년으로 접어들면서 패전의 기운이 본토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어린 소녀들은 연합군의 폭격을 피해 다니느라 또 다른 고역을 겪어야 했다. B-29 소이탄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한 밤 중에 들로 산으로 도피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공포에 떨며 밤새 눈 한번 부치지 못한 몸들이었지만 다음날은 여지없이 작업장으로 나서야 했다.

약속했던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다달이 적금을 해서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식이었다. 일본이 패망할 무렵에는 ‘조선에 돌아가 있으면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모두 거짓이었다.

**2) '일본군 위안부' 오인 손가락질... 해방된 땅에서의 고통**

1945년 해방이었다. 그러나 이들 앞에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일제 식민지에 대한 상처가 워낙 큰데다, 유교적 봉건 질서가 뿌리 깊게 자리해 있을 때였다. 즉, 일본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취급을 당한 것이다. '저 집 딸은 일본 다녀온 여자'라는 말은 곧 위안부를 뜻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오가던 혼담이 갑자기 깨지는 경우도 허다했다.

겨우 가정을 꾸렸더라도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어렵게 가정을 이뤄 자식을 낳고 살다가도 뒤늦게 소문을 듣게 된 남편으로부터 갖은 학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때론 자식들로부터의 냉대까지 받아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뒤늦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투쟁에 나서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한 일이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참으로 외롭기 짝이 없는 재판투쟁이었다. 원고들은 재판을 위해 일본에 다녀 올 때는, 이웃에 '서울에 있는 아들네한테 며칠 다녀온다'거나, 반대로 자식들한테는 '동네 계모임에서 강원도 며칠 관광 다녀오기로 했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야 했다.

심지어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갑이 넘는 나이에 이르러 이혼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었다. '정신대'를 '위안부'와 혼동하도록 방치한 한국 사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큰 책임은 원인제공을 하고도 패전 후 피해자들을 팽개친 일본 정부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겠다.

원고들은 대부분 80대 중반에 가까운 고령으로, 현재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 병마와 신음하며 혼자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문제는 군 위안부와 함께 대표적인 여성 인력 수탈의 상징이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조명받기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그동안 제대로 그 존재 자체마저 주목받아 오지 못해 왔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구별해서 볼 수 있도록 한 결정적 계기는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사건이었다. 그만큼 '소외 속의 소외'였던 것이다.

## 2. 패소 후 불붙기 시작한 진실규명 투쟁

### 1) "광주에 부여된 역사적 책무"...'시민모임'의 출범

2009년 2월 중순. 광주의 한 허름한 식당 한 켠에 18명의 시민들이 무릎을 마주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태동이었다.

"이미 다 끝난 마당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는 시선이 없지 않았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돌아보면 늦어도 한참 늦은 출발이 아닐 수 없었다. 한일 양국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8년 11월 도쿄 최고재판소 판결마저 끝난 마당이었다.

무슨 특별한 기대를 품을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동안 일본만 탓할 줄 알았지 정작 그동안 피해자들의 외로운 투쟁을 남의 일처럼 무관심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이 더 컸다.

특히 일본인들의 양심은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했다. 사실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10년에 걸친 손해배상소송을 전개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대표 高橋 信)이 그것이다. 지원회는 1999년 3월 1일 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 10여년에 이른 재판 기간 동안 원고 할머니들의 항공료와 체류비 일체를 지원해왔다. '공동변호단'(단장 內河惠一) 역시 무료 변론을 자처하며 할머니들의 투쟁에 앞장서 왔다.

특히 당시 이들은 나고야에서 도쿄까지 약 300km에 이르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생결단(死生決斷) 매주 금요일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원정 금요시위를 전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심지어 2008년 11월 최고재판소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빌미로 사건을 기각하자, '판결이 결코 미쓰비시한테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에 대한 도의적 책임마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원정 금요시위를 원래대로 강행하기로 한 상태였다. 실로 이 같은 소식들은 오히려 한국의 뜻있는 시민들을 면목 없게 만드는 것이자, 시민모임을 태동시킨 가장 큰 자극제였다.

이렇게 시민모임으로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이름깨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평범한 직장인, 예비 사회인, 세일즈맨, 학교 선생님, 시민단체 활동가, 학생, 주부,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가진 건 그저 빈손 뿐, 다만 누구보다 가슴 뜨거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날 10대에서 60대에 이른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은 역사가 광주에 부여한 책임을 외면하지 말자며 뜨겁게 손을 맞잡았다.

### 2) 208회에 걸친 1인 시위...13만5천명 항의 서명운동

역사에 사라질 뻔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투쟁에 불을 지른 것은 역설적이게도 미쓰비시였다. 2009년 9월 25일 광주 한 복판에 미쓰비시 자동차 전시장을 연 것이 그것이다.

그해 10월 5일부터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미쓰비시 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누가 강요한 것도 마지못해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1인 시위는 월~금 12시~1시까지 진행됐는데, 예상과 달리 1인 시위에는 평균 8~9명이 참가하는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1인 시위라도 맥이 끊어져서는 안된다는 데 이심전심 공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서로가 먼저 1인 시위 현장을 자처하다 보니 생긴 결과였다. 2010년 7월 30일까지 총 208회에 걸친 1인 시위 과정에 참여한 연인원만 약 2,000여명에 달했다. 대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그 어떤 이슈들에 있어서도 가히 그 전례가 없는 시민적 호응이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몸을 가누기 힘든 혹한의 눈보라, 장대 같은 빗속을 뚫고, 다시 찌는 듯한 폭염과 맞서며 1인 시위로 촉발된 시민들의 분출된 열기는 가을, 겨울, 봄을 넘어 여름으로 향했다. 결국 미쓰비시 자동차는 2011년 협상에 나설 것을 공식 표명하기에 이르렀고, 미쓰비시 자동차 역시 광주에 진출한 지 1년여 만인 2010년 11월 16일,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광주전시장을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2009년 12월 놀라운 소식이 일본으로부터 전해졌다.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이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으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해방 당시 액면가 그대로인 단돈 99엔(한화 약 1,300원)을 지급한 것. 99엔은 아이들 아이스크림 값에 불과한 금액이었다.

곧바로 항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목표는 일제시대 미쓰비시에 동원된 규모인 10만명이었다. 사실 쉽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추운 날씨를 아랑곳 하지 않고 시민모임 회원들은 주저 없이 매주 거리로 나섰다. 휴일도 잊은 채 거리에서, 직장에서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중고등학교를 찾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지나간 역사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결국 99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서명운동으로 표출됐다. 광주 86여개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 전국의 11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서명운동에 참가했으며,

이렇게 모인 서명은 애초 목표를 훨씬 뛰어넘어 13만5천여명에 이르렀다. 서명용지를 쌓아 놓으니 높이만 거의 성인 키에 육박했다.

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 역시 한국 국회의원 100명의 서명을 받아 이 사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전했다. 이용섭 의원을 포함, 광주 지역 각계를 대표하는 20여명의 일본 항의방문단은 2010년 6월 23일 오전 13만 5천여명의 항의 서명용지를 앞세우고 도쿄 시나가와(品川)역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까지 삼보일배(三步一拜) 시위에 나섰다. 항의방문단은 아울러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를 방문, 그해 7.14일까지 협상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양단간의 결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재판 이후 오히려 한국 내에서 뒤늦게 확산되는 反미쓰비시 운동 …. 미쓰비시 중공업으로서는 근로정신대 문제를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 3) "99엔 값을 투쟁 기금으로"...10만 희망릴레이

하나의 산을 넘으니,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 이후 오히려 더 불붙기 시작한 한국에서의 反미쓰비시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마지못해 협상 테이블에 나온 미쓰비시 중공업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구실로 시작부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예상됐던 상황이었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2011년 초, 시민모임은 고심을 거듭하던 끝에 또 하나의 새로운 결단을 내렸다. 이번에는 국민 10만명을 목표로 1인당 1천원씩의 투쟁기금 모금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일명 '10만 희망릴레이'가 그것이었다. 한화 1천원은 곧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지급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값, 10만명은 일제시대 미쓰비시로 강제동원된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사실, 서명운동도 쉽지 않는 마당에, 국민 10만명을 상대로 투쟁기금을 모금하는 일은 아직 그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치욕을 반드시 만회하자는 국민들의 의지는 뜨거웠다. '99엔의 치욕을 투쟁기금으로'라는 호소에 초등학생들부터 80대 촌로(村老)까지 한데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에는 광주광역시 산하 모든 공무원,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속 거의 모든 공무원까지 합세했다.

시민모임 회원들은 장장 9개월 동안 광주의 대표적 명산인 무등산 등산로에서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고 거리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에도 내일의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중심을 이뤘다. 광주지역 170여개에 이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역

시 학생들이 주도해 성금 모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 결과 애초 목표를 뛰어넘어 약 12만 2천여명이 성금모금에 동참하는 또 한 번의 전례 없는 일을 만들어 냈다.

## 3. 광주시 여자근로정신대 지원 조례의 의미와 향후 과제

### 1) 조례의 의미

① 시민사회의 의지 반영

▲208회에 걸친 미쓰비시 자동차 광주전시장 철수 1인 시위(2009.10~2010.7)

▲13만5천여명 사죄 촉구 항의 서명운동(2010년)

▲12만2천여명에 달하는 희망릴레이(2011년)….

짧지만 '시민모임'의 지난 과정은 역사의 그늘에 가려 자칫 역사의 창고에 들어가 묻힐 수 있었던 '근로정신대' 문제를 현실 역사의 무대로 끌어내는 과정이었다. 아울러 한일 과거청산 문제에서도 매우 드물게 피해 당사자와 지식인 사회를 뛰어 넘어, 결집된 시민적 의지를 힘껏 보여준 과정이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는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시민들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낸 투쟁의 산물이자, 시민들의 결집된 의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② 한국사회 내 역할을 구체화 시킨 사례

그동안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한일 양국 간의 문제나 한국 정부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한일 양국 간에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입장 차이로 전혀 진전이 없었으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책 역시 피해자들의 요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에서도 외면당하고 한국 정부로부터도 소외당하는' 상실감에 있었다.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지원책이 불충한 점을 감안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광주광역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는 한일 양국 간의 책임이나 한국 정부의 과제와는 별개로, 비록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피해자들을 위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③ 대일 협상력 강화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된 피해자 일부는 현재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15차례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그동안 보여준 시민적 의지를 넘어 이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④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최초의 조례

일제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조례가 없지 않지만, '광주광역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한국 최초의 지원 조례이자,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로, 원폭 피해자에 대한 경상남도 조례(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무관하게, 원폭 피해자에 대해 피폭 1세는 물론 후손까지를 포함한 포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2) 조례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지원 대상(제3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제4조)

- 생활보조비(월 30만원), 진료비(월 2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100만원)

○ 기타 사업(제9조)

-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국제교류사업 및 교육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 3) 향후 과제

① 조례의 지방자치단체 확산

근로정신대 동원은 전국적 범위에서 이뤄졌으며, 피해자들 거주 현황 역시 전국적 범위에 걸쳐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해, 전국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시급하겠다. 광주광역시의 사례가 만들어 진 이상,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과제라 하겠다.

② 미신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자칫 '위안부'로 오인 받고 있는 분위기,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기대감 미약(연 80만원 위로금), ▲신고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일부나 아직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현재 위원회 지원신청은 2012년 6월(특별법 제27조)로, 피해자조사 및 지원심사 업무는 2012년 12월로 완료(특별법 제18조) 될 예정임에 따라, 추가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위원회 기간 연장이 필수적 과제가 되고 있다.

③ 공동조사 및 사료 수집 추진

근로정신대 문제는 아직 제대로 된 사료 축적과 조사마저 이뤄지지 않는 분야인 만큼, 조례가 뒷받침하는 범위에서나마 진상규명을 위한 제반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객관적 사료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2012-04-01 조례 제 40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란 일제 강점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이하"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2.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
3.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제5조(지원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 1부(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등)
3. 진료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한다)
4.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
5. 입금통장 사본 1부

③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대상, 비대상) 통지서를 송

부한다.

**제6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2.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조사·연구 등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법인에 대하여 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에 관한 역사적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여자근로정신대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 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10조(지원재원)** 시장은 지원재원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2. 4. 1>**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2]

#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현황

[표] 3개 회사 현황

| 회사명 | 도쿄 아사이토 방적 | 미쓰비시 중공업 | 후지코시 강재 |
|---|---|---|---|
| 작업장 | 누마즈 공장 | 나고야항공제작소<br>도토쿠 공장<br>오에 공장 | 도야마 공장 |
| 소재지 | 시즈오카현<br>누마즈시 오카 | 아이치현 나고야시<br>미나토구 오에정 | 도야마현 도야마시 |
| 동원인원 | 약 300여명 추정 | 약 300여명 추정 | 1,089명 추정 |
| 공탁자료 | 71명<br>(3,183엔28전) | 기록 없음 | 485명<br>(90,325엔76전) |
| 현재 확인된 생존자 | 30명 | 31명 | 101명 |

출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3개 기업으로 동원된 수치를 약 1,6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확인된 동원기업(3개소) 및 생존자는 162명으로 추정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참고로 광주광역시 관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총 30명(동구 6, 서구 6, 남구 7, 북구 7, 광산구 4)이며, 현재 생존자는 15명(동구 3, 서구 4, 남구 2, 북구 4, 광산구 2)으로 파악되고 있음.

# 韓国地方政府次元の
# 日帝強制動員被害支援事例と向後課題

## - 光州広域市の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支援条例を中心に -

金善浩(光州広域市教育議員、
「勤労挺身隊ハルモニと共にする市民会」顧問)

## 1。「朝鮮女子勤労挺身隊」とは?

### 1)「日本に行くとお金も稼ぐし、上級学校にも進学できる」

ヤン・クムドク（84,　光州広域市）ハルモニが当時日本人教師と校長の嘘によって日本に強制動員されたのは太平洋戦争が差し詰めになりかけていた1944年5月頃。敗色が濃くなった日帝は戦時労働力の調達のために13才、14才の小さい小学生ぐらいの少女達も犠牲にした。

当時、全南の羅州小学校6学生に通っていたヤン・クムドクハルモニは日本人校長と担任先生から「日本に行くと上級学校にも進学できるし、お金も稼げる」と日本行きを誘われた。貧困な生活の中、上級学校に進学できるという提案は学びたがっている小さい少女達に好かれるに充分であった。

動員対象は小学校6年生に通ったり、小学校を卒業したばかりで家事をやっていた13～15才の少女達であった。さらには12才の少女もいた。目的は日帝の戦時労働力の調達であった。そのためには円滑な意思疎通が必要だった。早めに日本語を学習させられた小学校の在学生や小学校を履修した人が適切だった。木浦、光州、順天、麗水など全南地域の5ヵ所の都市から動員された人達は麗水で連絡船に乗って下関に着いてから、代表的な工業都市の名古屋の三菱重工業名古屋

航空機製作所に配置された。そして日帝が敗亡するまで飢餓や酷悪な監視の中で一日に8～10時間の強制労働に虐げられるしかなかった。

当時、名古屋は日本最大の軍需工場が密集していた地域で、三菱重工業は当時、軍用航空機（偵察機）を製作していた。ヤンハルモニみたいに、名古屋三菱重工業名古屋航空機製作所に動員された人は光州・全南から約150名で、当時、忠南地域から動員された約150名を含め、約300名に近い小さい少女達が人力収奪の犠牲になった。

軍需工場での労働は酷悪であった。わずか13～15才の小さい少女達に重い棚、飛行機機体などに慣れるわけがなかった。棚は手の届かない高いところにあって、りんご箱を踏んでその上で危ない状態でペンキを塗らざるを得なかったし、酷寒に手袋もなしに素手で鉄板に触ったり、冷や水で部品を洗ったりして手は腫れて、荒れていた。劣悪な作業環境と強要された日割りのせいで負傷も多かった。キム・ソンジュ（84. 京畿道安養市）ハルモニの場合は棚の作業中に指が切れてしまった。

特に、飢えが問題だった。おかずとは味噌汁やたくあん一切れがすべてだった。飢えが我慢できない少女達は空腹を水で満たしたり、さらには道端の名も知らぬ雑草で腹を満たしたりした。

1944年12月7日のお昼、東南海大地震が名古屋一帯に大打撃を与えた。名古屋三菱工場も例外なく、日本人を含めて多くの犠牲者が発生した。こんな状況の中で全南出身の少女6名が建物の積み重ねの下敷になって、現場で死亡した。

1945年になっては本州にまで敗戦の影が落とされた。その中で小さい少女達は連合軍の爆撃を避けるという新たな苦役に服した。恐怖で震えながら一晩中眠れなくても、翌日には余地なく作業場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約束した賃金ももらえなかった。「毎月積み金して後で支給する」と言った。日本が敗亡する頃には「朝鮮に帰ったら送ってあげる」と言った。しかし、結局すべてが嘘であった。

### 2)「日本軍慰安婦」誤認・後ろ指…解放された土地での苦痛

1945年、解放だった。しかし、彼らの前にはまた他の苦痛が待っていた。その時は日帝植民地時代の傷が深く、儒教的な封建秩序も広がっている時期であった。つまり、日本に行ってきたという理由だけで日本軍慰安婦扱いをされたのだ。「あの家の娘は日本に行ってきた女」という言葉は「あの家の娘は慰安婦」という意味だった。それで縁談が行き交う途中で縁談が壊れる場合も多かった。

ようやく家庭を成してもその束縛から逃れたとは言えない。そうして家庭を成し、子供を産んで暮しな

がらも結婚した後にその噂を耳にした夫から様々な虐待をされたりしたからだ。大体の被害者は正常な家庭を成せなかったし、時には子供から冷遇を受けることもあった。

こんな状況で日本政府や三菱に対して真相究明と名誉回復の闘争を始めるのは大きな勇気が必要だった。だからこそ真に寂しい裁判闘争であった。原告達は裁判のために日本に行く時は、近所に「ソウルの息子のところに行く」とか、また子供達には「近所会で江原道に観光に行く」とか言いながら、言い訳をするほかなかった。

さらには勤労挺身隊被害者だという事実が知られると同時に、還暦を超えた歳で離婚に至った場合もあった。「挺身隊」を「慰安婦」と混同するように放置した韓国社会も問題がないとは限らない。ところが、より大きな責任は原因を提供したのに、敗戦後被害者達を見て見ぬふりをした日本政府にあるということは否認できない。

原告達は大体80代半ばに近い高齢で、現在家族と離れて、病魔に冒され貧しく孤独な生活を続けている。「朝鮮女子勤労挺身隊」問題は軍慰安婦と共に代表的な女性人力収奪の象徴である。しかし、90年代以後に注目を浴び始めた「日本軍慰安婦」問題に相対的に隠され、今までその存在自体も注目を浴びることがなかった。「朝鮮女子勤労挺身隊」と「日本軍慰安婦」被害者を区別できるようになった決定的な契機は2009年ヤン・クムドクハルモニなど三菱勤労挺身隊訴訟原告達に厚生年金の脱退手当てとして支給された「99円」事件であった。それだけ「疎外の中の疎外」だったのだ。

## 2。敗訴後、燃え上がり始めた真実糾明闘争

### 1)「光州に与えられた歴史的な責務」…「市民会」の出帆

2009年2月の中旬。光州のある食堂の片隅に18名の市民達が向かい合った。「勤労挺身隊ハルモニと共にする市民会」のはじまりだった。

「もう終わった時点で、できることがあるのか」という視線もなかったとは言えない。その言葉が間違っているとも言えない。振り返ってみると、何かを始めるには手遅れかも知れなかった。日韓両国の市民達の努力にも関わらず、2008年11月の東京最高裁判所の判決まで終わったところだった。

特別な期待を持つような状況ではなかった。むしろ、今まで日本のせいにするばかりで、被害者の孤独な闘争を人の事のように思い、関心を持っていなかったことに恥じや良心の呵責を感じた。

特に、日本人の「良心」に私たちはさらに恥ずかしく感じた。実はハルモニ達が日本政府と三菱を相手に10年にかけて損害賠償訴訟を展開できたのは日本の良心的な市民達の支援が絶対的であった。「名古屋三菱勤労挺身隊訴訟を支援する会」（代表　　高橋信）がそれだ。支援会は1999年3月1日訴訟が始まると同時に約10年に至る裁判期間の間、原告ハルモニ達の航空料や滞在費一体を支援してきた。「共同弁護団」（団長　　内河恵一）も無料弁論を自任し、ハルモニ達の闘争に先立ってきた。

特に当時、彼らは名古屋から東京まで約300kmに至る遠い道を文句も言えず死生決断で毎週金曜日に東京三菱重工業本社の前で「遠征金曜示威」を展開していた。さらには2008年11月、最高裁判所が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を引金にして事件を棄却すると、「判決が決して三菱に強制連行や強制労働に対した道義的な責任まで免罪符を与えたわけではない」と、「遠征金曜示威」をいつも通りに強行することにしたところだった。実にこのような消息はむしろ韓国の有志な市民達を恥ずかしくさせ、「市民会」を胎動させたもっとも大きな刺激剤であった。

「市民会」で集まった会員の中に著名な人はいなかった。平凡な会社員、予備社会人、サラリーマン、教師、市民団体活動家、学生、主婦、労働者が中心で、持っているのは手ぶらだけだが、ただ誰より胸は熱かった。そしてこの日、10代から60代に至る平凡なこの人達は光州が歴史に与えられた責任から目を逸さないように決意を堅めた。

### 2)　208回にわたった1人示威…13万5千名抗議署名運動

歴史から消え去りかけていた三菱勤労挺身隊闘争に火を付けたのは逆説的に三菱だった。2009年9月25日、光州市内に三菱自動車展示場を開いたのだ。

同年10月5日から勤労挺身隊問題の解決を促しながら三菱自動車展示場の前で1人示威を始めた。強要でもなく、強引でもなかった。1人示威は月曜日から金曜日まで、12時から1時まで行われたが、予想外に1人示威には平均8～9名が参加する状況になった。市民達にできることが少ない中、1人示威でも続い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共感ができ、多くの市民が1人示威を自任することによる結果だった。2010年7月30日まで総208回の1人示威に参加した延人員だけでも約2000名に達した。対日過去史問題に関しては勿論、社会的などんなイシューに関してもこのような呼応はなかった。

困ったことがなかったとは言えない。しかし、耐えられないほどの酷寒の吹雪、どしゃ降りの雨の中を切り抜けて、また猛暑と戦いながら1人示威を通じて触発した多くの市民達の熱情は秋、冬、春を

回って夏に向かった。結局、三菱自動車は2011年交渉に出るということを公式的に表明するようになり、三菱自動車も光州に進出してから約1年ぶりの2010年11月16日、市民達の不定的な世論に耐えず、結局、光州展示場を撤去するしかなかった。

その前に、2009年12月には日本から驚倒の消息が届いた。厚生労働省の社会保険庁は厚生年金の脱退手当で三菱勤労挺身隊ハルモニ達に解放当時の額面価格どおりの99円（韓貨　約1300)を支給したこと。99円はお菓子を買えるぐらいの金額であった。

早速、抗議署名運動を始めた。目標は日帝時代、三菱に動員された規模の10万名だった。容易なことではなかった。しかし、酷寒にも関わらず「市民会」の会員は毎週街に出た。休日にも街で、または職場で市民達に訴えた。中・高等学校を訪れて未来の主役である青少年達に過ぎ去った歴史を思い起こさせた。

結局、99円に対する韓国国民の怒りは署名運動で表出した。光州の約86ヵ所の小・中・高等学校を含めて、全国の114ヵ所の小・中・高等学校が署名運動に参加し、こうして集まった署名は最初の目標を大きく上回る約13万5千名に至った。署名用紙を積み重ねたら、その高さが大人の背と同じぐらいだった。

李庸燮（イ・ヨンソブ）国会議員（民主党）も韓国の国会議員、約100名の署名をもらってこの思案に対する国会の関心を伝えた。李庸燮議員を含め、光州地域の各階層を代表する約20名の「日本抗議訪問団」は2010年6月23日午前、13万5千名の抗議署名用紙を前にして東京品川駅から三菱重工業本社まで「三歩一拝」示威に出た。「抗議訪問団」はそれと共に三菱重工業本社を訪問し、同年7月14日まで交渉に応じるかどうかという決断を促した。裁判以後、むしろ韓国内で拡散する反三菱運動…。三菱重工業としては勤労挺身隊問題を今までとは違う新たな次元で悩ま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直面した。

### 3)「99円を闘争基金に」…10万希望リレー

一つの山を越えたら, また他の山が待っていた。裁判以後、むしろ燃え上がり始めた韓国での反三菱世論を遮断しようとして、やむを得ず交渉の場に出た三菱重工業が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を口実にして最初からずっと誠意のない態度を取っていたのだ。充分に予想できた状況で、何か新しい突破口が必要であった。

2011年初、「市民会」は悩み続けた結果、新たな決断を下した。今度は国民10万名を目標に1人当たり1千ウォンの闘争基金の募金運動に突き入ったのだ。一名「10万希望リレー」がそれなの

だ。韓貨1千ウォンはつまり、日本政府が勤労挺身隊ハルモニ達に支給した厚生年金の脱退手当の99円。10万名は日帝時代に三菱に強制動員された数を象徴するのであった。

実は署名運動も容易ではないのに国民10万名を対象にして闘争基金を募金することはまだ前例のないことだった。しかし、歴史の恥辱を必ず挽回しようとする国民の意志は熱かった。「99円の恥辱を闘争基金に」という訴えに小学生から80代の村老まで参加したのだ。今回は光州広域市傘下の全ての公務員、光州広域市教育庁所属のほとんどの公務員まで加わった。

「市民会」の会員達は長々と9ヶ月間光州の代表的な名山である「無等山」（ムドンサン）登山路で寒さや熱さに関係せずに街で募金キャンペーンを張った。今度も未来の韓国社会の主役である青少年達が中心になった。光州地域の約170ヵ所の中・高等学校の学生達も自発的に募金に参加した。その結果、最初の目的を大きく上回る約12万2千名が募金に参加して、もう一度前例のない事を起こした。

## 3。光州市女子勤労挺身隊支援条例の意味と向後課題

### 1） 条例の意味

① 市民社会の意志を反映

▲208回にわたった三菱自動車光州展示場撤去１人示威(2009.10~2010.7)

▲約13万5千名の謝罪促し抗議署名運動(2010年)

▲約12万2千名に至る希望リレー(2011年)…。

まだ短いが、「市民会」の歩んだ道は歴史の裏面に隠され、忘れかけていた「勤労挺身隊」問題を現実の歴史舞台に引き出す過程であった。同時に日韓過去清算問題にあっても稀に被害者本人と知識人社会を問わず結集した市民的な意志を見事に見せた過程でもあった。

「光州広域市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支援条例」は歴史の傷を治癒し、正義を建て直そうとする市民達の至難の過程を通じて作り出した闘争の産物であり、市民達の結集した意志が地方自治体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かを見せる重要な事例でもある。

② 韓国社会内の役割を具体化した事例

今まで日帝強制動員の問題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を理由で、日韓両国の問題、あ

るいは韓国政府次元の問題と認識されてきた。しかし、日韓両国の間では「日韓請求権協定」に対する立場差で進められなく、日帝強制動員被害者達に対する韓国政府の支援策もやはり被害者達の要求には及ばない状態で、強制動員被害者達は「日本からも背けられ、韓国政府からも目を逸される」という喪失感に満ちていた。

光州広域市議会と光州広域市は「地方自治法」第22条に地方自治体は法令の範囲内でその事務に関して条例を制定できるように明示していて、同法第9条2項第2号で住民の福祉に関する事業は地方自治体の所管事務に該当するという条項を根拠にして韓国政府の支援策が不充分なことを考慮して今回の条例を制定することになった。

今回「光州広域市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支援条例」は日韓両国の責任や韓国政府の課題とは別として、たとえ制限的な範囲だが、被害者達のために

③　対日交渉力の強化

三菱重工業名古屋航空機製作所に動員された被害者の一部は現在、戦犯企業の三菱重工業を相手に被害者救済のための交渉を進行している。15回にわたった交渉にも関わらず、まだ足踏みの状態である中で、今回の条例は今まで見せた市民的な意志を超え、この問題に対する地方自治体次元の意志を闡明したということに格別な意味がある。

④　強制動員被害に対する最初の条例

日帝被害者問題に関する地方自治体次元の支援条例はあるが、「光州広域市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支援条例」は勤労挺身隊被害者に対する韓国最初の支援条例で、強制動員被害者を対象にした最初の条例だとういう意味がある。

ちなみに、原爆被害者に対する慶尚南道の条例（慶尚南道原子爆弾被害者支援条例）は日帝強制動員被害者と関係なく、原爆被害者に対して被爆1世代は勿論、その子孫まで含め、包括な範囲を対象にしている。

## 2)　条例の重要内容

| |
|---|
| <重要内容> |
| ○　支援対象（第3条） |
| －　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委員会で被害者に決定した者の中で1年以上市に居住する者 |

| |
|---|
| ○　支援内容（第4条） |
| －　生活補助費（月30万ウォン）、診療費（月20万ウォン以内）、死亡時葬祭費（100万ウォン） |
| ○　その他の事業（第9条） |
| －　資料収集及び調査研究、国際交流事業及び教育事業及び教育広報事業に対する支援 |

### 3)　向後課題

①　条例の地方自治団体への拡散

勤労挺身隊の動員は全国的な範囲で行われたし、被害者達の居住現況も全国的な範囲である。したがって、光州広域市の事例を全国に伝え、全国的な世論を喚起することが至急である。光州広域市の事例ができた以上、これを地方自治体で受け入れることはあまり難しくないが、どれだけこの問題に共感できるかはまた他の課題である。

②　未申告被害者に対する救済法案の工面

条例では支援対象を「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委員会」で被害者に決定した人としているが、▲ 韓国社会でとかく「慰安婦」に誤解されている雰囲気　▲ 被害者支援金に対する低い期待（年80万ウォンの慰労金）▲　申告に対する情報不足などで一部であるが、まだ申告していない被害者が存在している現実である。

特に現在、委員会の支援申請は2012.6月（特別法第27条）で、被害者の調査及び支援審査の業務は2012.12月で完了（特別法第18条）する予定で、追加申告があるとしても実際に支援を受けられないと展望されるだけ、委員会の期間延長が必須的な課題になっている。

③　共同調査及び資料収集の推進

勤労挺身隊問題はまだ真面に資料の蓄積と調査が行われていない分野なだけ、条例で明示されている範囲内ででも、真相究明のための諸般調査研究活動を通じて勤労挺身隊問題に対する客観的な資料を蓄積する必要がある。

[参考資料　1]

# 光州広域市日帝強点期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支援条例

（制定）2012-04-01 条例第4064号

**第1条（目的）** この条例は日帝強占期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に対する生活支援と名誉回復及び被害救済活動を支援することによって、生活の安定を図ると共に正しい史観の成立と人権増進に貢献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正義）** この条例で「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というのは日帝強占期に懐柔及び強圧などによって強制に動員され、軍需会社などで強制労役被害を受けた女性のことを言う。

**第3条（支援対象）** この条例による支援対象者は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として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委員会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員会（以下「対日抗争期支援委員会」とする）の審査によって被害者に決定された者の中、光州広域市の住民登録証を持って、1年以上居住し続けた者とする。

**第4条（支援内容）** 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に対する支援内容（以下「生活補助費など」とする）は次の各号の通りである。

1. 生活補助費　月30万ウォン
2. 診療費支援（本人負担金中で月20万ウォン以内とする）
3. 死亡時葬祭費　100万ウォン

**第5条（支援申請）** ① 被害者は被害証明資料を添付して書面で住民登録地の管轄洞長に生活補助費などの支給を申請する。

② 第1項の生活補助費などの支給申請の具備書類は次の各号の通りである。

1. 生活補助費など支給宣誓書　1部
2. 被害証明資料　1部（対日抗争期支援委員会の審議・決定通知書など）
3. 診療費領収証（該当者に限る）
4. 死亡診断書又は抹消者謄本（該当者に限る）
5. 入金通帳の写本　1部

③ 市長は申請書の受付後30日以内に申請者に決定（対象・非対象）通知書を送付する。

**第6条（支給方法）** 生活補助費などの支給方法は次の各号の通りである。

1. 支援対象者の個人別銀行口座に支給する。
2. 生活補助費は毎月の末まで支給することを原則にするものの、転出・死亡などによって居住期間が15日未満の場合は支給しない。
3. 葬祭費は支給対象者と同居する家族又は葬礼執行人に支給できる。

**第7条（支援中止）** 支援対象者が次の各号の事由が発生した場合は生活補助費などの支援を中止する。

1. 支援対象者が支援を拒否した場合
2. 転出・死亡などの事由で支援対象者としての資格を喪失した場合

**第8条（生活補助費などの回収）** ① 市長はこの条例によって生活補助費などを支給された者が次の各号の一つに該当する場合は全部又は一部の回収ができる。

1. 嘘やその他の不定な方法で生活補助費などを支給された場合
2. 過・誤支給された場合

② 市長は第1項によって回収する場合、生活補助費などを返還する者が定められた日にちまで返還しないと国税滞納処分の例によって徴収する。

**第9条（調査・研究などの事業支援）** 市長は次の各号の事業を行う団体・法人に対して事業経費の一部又は全部を予算の範囲内で支援できる。

1. 女子勤労挺身隊被害に関する歴史的な資料収集及び調査・研究
2. 女子勤労挺身隊被害に関する教育及び広報
3. 女子勤労挺身に関する国際交流及び共同調査
4. 第1号から第3号までの事業に属する事業

**第10条（支援財源）** 市長は支援財源を予算として確保するように努力する。

**第11条（施行規則）** この条例の施行に必要な事項は規則として定める。

附　　則<2012. 4. 1>

この条例は2012年7月1日から施行する。

[参考資料　2]

# 朝鮮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現況

〔表〕3ヶ所の会社現況

| 会社名 | 東京麻糸紡績 | 三菱重工業 | 不二越鋼材 |
|---|---|---|---|
| 作業場 | 沼津工場 | 名古屋航空製作所<br>道徳工場<br>大江工場 | 富山工場 |
| 所在地 | 静岡県<br>沼津市 大岡 | 愛知県名古屋市<br>港区 大江町 | 富山県 富山市 |
| 動員人員 | 約300名推定 | 約300名推定 | 約1,089名推定 |
| 供託資料 | 71名<br>(3,183円28銭) | 記録なし | 485名<br>(90,325円76銭) |
| 現在確認した<br>生存者 | 30名 | 31名 | 101名 |

出処: 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委員会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員会

○ 3ヶ所の企業に動員された数値を約1,600名と推定しているが、今まで「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委員会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員会」で確認した動員企業（3ヶ所）及び生存者は162名で、推定値に大きく下回っている。

○ ちなみに、光州広域市館内の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は総30名（東区6、西区6、南区7、光山区4）で、現在、生存者は15名（東区3、西区4、南区2、北区4、光山区2）と把握されている。

# 전후 일본의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 미보상과 문제점

히구치 유이치
(樋口雄一,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장)

## 1. 머릿말

전후 일본 사회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재 상황이다. 물론 한일 조약 의론에서 일부 논의되었지만, 일본의 한국지배에 대한 정치적 보상은 강했으나 문화, 사회, 인적,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보상은 매우 약했다. 한일협정 역시 일본이 가해자라는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1965년 한일협정이 있었던 해에 재일조선인이 '조선인강제연행의 기록'을 일본 내에서 공개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일본인은 강제동원에 대한 사실 발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후에 몇몇 일본인에 의해 강제동원에 관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진보적인 일본인에게 조차도 강제동원 사실 확인 및 피해연구, 보상에 관한 관심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인식과 식민지 지배의 실체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3.1운동, 창씨개명, 강제동원 등이 있었다는 것은 단지 단순한 용어로만 해설되어 있을 뿐이고 그 실상은 알지 못한다. 더구나 쌀 수탈 등 삶에 심각한 고통을 안겨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현재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후 보상 이전에 일본인의 다수가 '왜 보상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것이다. 독일 등에서

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관한 사실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 너무 늦었지만 강제동원의 강제성과 임금차별, 강제노동 등의 사실을 일본인 전체가 아는 것이 강제동원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라고 생각한다. 또 나는 이 강제동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병적(兵的)에 동원된 군인, 군속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 2. 일본에서 강제동원 피해 미보상 문제점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에는 한국에 남겨진 가족, 동원자에 대한 노동보상, 미불금, 강제예금과 잔고, 부상과 질병을 포함한 희생자 보상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하여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정부차원의 조사도 없었다. 이런 태도에 영향을 받아 기업도 한국인 노동자의 요구에 대응하려고 하지 않고 대다수의 일본 국민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오히려 강제동원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강해지고 있다. 이것이 강제동원피해 미보상의 하나의 문제점이다. 일부의 일본인들이 시민운동으로 실체를 해명하고자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한정된 일본인에 의해서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1) 일본에서 강제노동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재일조선・한국인, 일본 민간연구자들이 일부 밝혔지만 기본적으로 강제동원수를 포함해 확실하지 않다. 아직도 노동실태, 지망자수, 미불금, 예금 등 밝혀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 정부의 조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조사기관 설치 등 적극적 도움이 없이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2) 이 조사를 위해서는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기업문서(홋카이도 개척기념관・규슈대학・미쓰이 문고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문서, 사문서 등을 정리・공개해야한다. 그리고 광산, 탄갱, 공장 등의 명부 등 일부 자료는 남아있지만 토목공사와 같이 기록자료가 부족한 분야는 청취 등 구술자료를 수집해야한다. 또한 일본 지역마다 강제동원 장소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3)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임금차별・노동실태・예금 등 실체조사를 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국민에게 공표하고 보상기관을 설치해 보상을 해야 한다. 또, 강제동원 실체를 일본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과 사회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행물을 발행해야 한다.

4) 그 동안 한국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많은 강제노동의 사실이 밝혀졌고 간행물로 발간된 자료도 많다. 그 성과를 일본 정부가 배우거나 혹은 일본인에게 알리기 위한 번역, 간행을 일본 정부가 나서야 한다.

5) 이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이 나서는 동시에 일본 국민, 정치가 등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이 이루어진 후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당연한 것이지만, 실현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특히 현재 일본 정부는 한일 조약에서 해결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당면한 당사자, 유족들은 고령화가 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화하길 기다리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지적되지 않았던 강제동원 사실을 제시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편을 만들어야 하며 현재 드러난 사실에 덧붙여 일정 수준의 보상을 위한 과제도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 3. 1944년~45년 강제동원 실체에서

이미 확인된 것과 같이 강제동원 대상자는 한국 남부 농촌에서 동원되었고 1944년부터 북부에서도 동원이 실시되었다. 이것은 한국 남부 농촌의 '과잉인구'를 노동동원 대상자로 만들어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본으로 쌀 이출 확대를 꾀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노동자로 일본 국내에 동원하여 일본 노동자 부족을 보충한다는 2가지를 노렸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 농촌의 노동자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졌음에도 점차 강제성은 더해져 갔다. 1944년에는 일본 요구에 따라 일본 국내의 동원만 최저로도 29만명을 송출했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는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조차 44년 4월 도지사에게 지시로 '강제공출' 사실을 인정하고 동원을 장려하였던 것이다. 이 해에는 징병도 실시되어 군인, 군속으로 혹은 노동목적의 농경대, 선박병으로 동원도 더해졌다. 44년 말에는 일

본에서 10만명이나 추가로 동원 요청을 하였다. 이 무렵에 최소한으로 어림잡아도 50만명 전후의 한국인이 군대와 일본에 노동자로 동원되었다. 강제동원 역사 중 최대 규모의 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이미 노동자 부족이 심각했고 징용을 피하는 행동도 눈에 띄었지만, 총독부는 경찰을 중심으로 억압체제와 명목적인 동원 원호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고자 했다.

1944년 9월에 조선총독부는 '근로동원원호회'를 설립하고 '근로원호・동원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설립했다. 각도에는 근로원호상담소, 근로보고회 등이 설치되었다. 동년 9월에는 행정조직도 노무과에서 근로동원과로 되었다. 하지만, 이들 조직은 형태만 바꾼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동원의 주무부서는 경찰로, 도망, 징용기피 등에 대해서 44년 10월 경기도 경찰부장은 「징용을 기피하는 자는 단호히 단속을 할 방침이다」고 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징용령 위반자의 일제 검속을 실시해 「지금 다수의 용의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동원은 문자 그대로 「강제동원」이었다. 그리고 이 해에 일본 국내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다. 아이치현(愛知縣) 내에서 일 하고 있었던 한국인 노동자를 중요산업인 후쿠오카현(福岡縣) 탄광으로 이중징용자로 보내거나 '경성' 출신 학생을 중심으로 한 징용자를 후쿠오카현 미쓰이(三井) 다가와(田川)탄광으로 동원했다. 또 새롭게 일본 내의 군 직할공장에도 징용자가 동원되었다. 노동자 부족의 심각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듯 한국인의 일본으로의 동원 사실은 불행하게도 일본인 대부분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보상문제의 대상 외로 여겨졌던 한국 내부에서의 노동동원이다.

## 4. 한국 내 노동동원

1944년도는 군사적으로 궁지에 몰린 일본에게 한국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공업물자동원, 대륙에서 운송루트 확보, 쌀 증산을 하여 일본으로 이송하는 것, 군사기지로의 역할 증대 등이었다. 이 해에 작성된 일본 정부의 문서에 의하면 이 시기의 조선 내의 노동수급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종래 채용해온 관의 강력한 알선으로도 노무 충족이 뜻처럼 되지 않아 강력한 근로동원체제를 급속히 정비함과 동시에 국민징용령을 전면적으로 발동했으나 이것이 충족되는 것도 쉽지 않은 현황」

이라고 하고 있다.

앞에서 본 일본으로 강제동원에 더해져 1944년에 한국 내에서 동원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은 다음 표와 같이 총 871,000명에 이른다.

| 동원장소 | 도내동원 필요수 | 도외동원 필요수 |
|---|---|---|
| 공장 | 45,000 | 25,000 |
| 광산 | 173,000 | 20,000 |
| 토건 | 501,000 | 60,000 |
| 교통운수 | 22,000 | |
| 임업 | 21,000 | |
| 계 | 766,000 | 105,000 |

이런 동원이 어느 정도 실시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상당히 강압적인 동원이 실시되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도 지사의 발언이 있는데 전라북도지사는 14세 이상은 전부 근로보국대로 할 것, 특히 19~30세까지의 남녀로 특별근로보국대를 조직할 것, 농공업에는 여자・노인・아이를 충당할 것, 도내동원에는 체력이 비교적 약한 자, 서북선 및 내지(일본)행의 사람은 가장 강건한 사람을 전용하라고 발언했다. 이는 각도에 방침이 내려진 동원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각도에서 어떻게 한국 내로 동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사례를 들 수 있지만, 전체로의 통계적인 숫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부터의 연구가 과제이다. 일본은 한국 내 동원자에 대해서도 강제동원 범주 안에 포함하여야만 한다.

## 끝으로

전시하의 한국 내에서는 노동자의 강제동원에 한하지 않고 농민의 쌀 등 생산물의 공출도 그리고 공제강제예금, 국채구입 등이 강요되었다. 이들 예금의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가치를 상실했고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전시동원에 의한 노동력 부족 등으로 1942~44년에는 연속으로 흉작이 되고 식량사정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청소년의 체력이 매우 나빠지는 등 한국 민중에게 현저한 생활난을 초래했다. 강제동원 된 노동자와 군인·군속의 남겨진 가족은 한층 더 곤란한 생활을 강요당했다. 또 전시하의 동원, 수탈에 의해 한국의 전후건설에도 많은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하의 한국 상황은 일본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조사·연구도 일부 민간에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인은 체험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본 내부의 인식은 희박하다. 이런 차이를 좁히는 것이 강제동원 피해 미보상 문제해결의 지름길 중 하나일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독일에서는 아우슈비츠의 참상을 독일 국민이 알고 보상이 실현되었는데 일본은 이에 상당한 한국 전시하의 식민지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일본의 36년간에 달하는 강점기 전체의 문제 해결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역사인식 문제로 자리매김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집회를 개최하고 사실을 해명하는 작업을 계속하며 그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에 기여하고 싶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강제동원 가해의 사실을 알릴 노력을 계속하고자 한다.

# 戦後日本の韓国人強制動員被害未補償と問題点

樋口雄一(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会長)

## 1。はじめに

戰後日本社會の中で强制動員者に對する補償という問題については、ほとんど檢討されてこなかったというのが現狀であろう。もちろん日韓條約の議論の中では一部議論されたが、日本の韓國支配という事實に對する政治的な補償という側面が强く、文化・社會・人的・强制動員被害に對する補償という視点は極めて弱かったのである。日本の加害という事實確認が日本社會の中でおろそかにされる中での日韓條約であった。これを反映して强制動員に關する事實の發掘も1965年の日韓條約の年に在日朝鮮人によって『朝鮮人强制連行の記錄』として日本區內での事實が發表されるまでは日本人の多數は問題として認識していなかった。

その後、日本人市民の手によっていくつかの事實の發掘も行われているが、これら日本人は少數派であり、全体としては無關心である。

この韓國に對する認識を反映して進步的、あるいは保守的な日本人に共通して日本國內全域で展開されていた强制動員者の事實確認と被害やその研究、補償に對する關心は極めて少ない。こうした日本人の韓國に對する認識は日本の植民地支配が合法的であったとする認識と植民地支配の實体を知らない、すなわちこの時期の歷史を知らないことに起因すると考えられる。3.1運動、創氏改名、强制動員などがあつたことは一応、用語として教えられているが單なる用語として解說されているのみで、中身は教えられていない。また、米の收奪など生活に深刻な影響を与えた事實については教えられていないのである。

現在、日本にとっての最も重要な問題は戦後補償以前に日本人の多數は「なぜ補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についての知識が無いのである。ドイツなどではアウシュビッツの事實を國民が皆知っているのである。遅きに失するが强制動員の强制制や賃金差別、强制勞働などの事實を日本人全体が知ることが强制動員未補償の解決の道につながると考えられる。なお、私はこの强制動員という概念の中には兵的に動員された軍人・軍屬を含むと考えている。

## 2。日本における強制動員被害未補償の問題点

强制動員被害は韓國に殘された家族、動員者に對する勞働補償・未拂い賃金、强制預金と殘高、傷病を含む犠牲者補償、など他方面にわたる。こうした課題に對し、日本政府は日韓條約で解決積みとして全く關心を示していないし、政府が調査を行うこともない。この態度を反映し企業も韓國人勞働者の要求に對応しようとしていない。日本國民の大半は關心を持つことがない。むしろ、强制動員自体がなかったという議論が廣がり、强くなっている。これが强制動員被害未補償の一つの問題点である。一部の日本人が市民運動として實体を解明しようとしているにすぎないのである。限られた日本人によって市民運動が展開されていることも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うした事態に對して原則的にはどのようなことが考えられるのか。

1）日本における强制勞働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かについては在日朝鮮・韓國人、日本の民間研究者によって一部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が、基本的な强制動員數も含めて明らかでない。勞働の實態、志望者數、未拂い賃金、預金など課題は山積している。韓國政府による調査と成果があるものの、どうしても日本政府による主体的な實体調査と調査機關の設置が必要である。

2）この調査のためには膨大に殘されている企業文書（北海道開拓記念館・九州大學　三井文庫など）、國および地方自治体の公文書、私文書などを整理・公開すること。さらに鉱山・炭坑・工場などの名簿など一部資料は殘されているが土木などは資料的な裏付けは困難であり、ヒヤリングなどの資料を蓄積すべきである。日本の地域毎の强

制動員の場所を確定する必要がある。

3） 日本政府は强制動員・賃金差別・勞働實態・預金などの實体調査をして事實が明らかになり次第國民に公表し、補償機關を設置して補償をすべきである。また、强制動員の實体を日本國民に知らせるため教育や社會教育の場で生かせるような刊行物を發行すること。

4） この間、韓國の眞相究明委員會の活動によって多くの强制勞働の事實が明らかにされており、刊行物となっている資料も多い。それらの成果を日本政府が學び、あるいは日本人が學ぶために翻譯・刊行を日本政府が行うこと。

5） こうしたことを實行するためには日本人が努力し、同時に日本の國民、政治家などの理解と協力が不可欠であり、市民を基盤に運動を展開していくべきであろう。

この上で强制動員被害に對する十分な補償を行うべきである。

これらの課題はあたり前のことであるが、實現するには多くの問題があり、特に現在の日本政府の姿勢は日韓條約で解決濟みとする見解を固執している。しかし、当面の当事者、遺族などの高齢化が進行し早い解決が望まれている。これまで日本では指摘されてこなかった强制動員の事實を提示して問題解決の手法の一つとしたい。現在判明している事實に加えていくつかの補償のための課題の解明が必要になっている。

## 3。1944年～45年強制動員の実体から

すでに確認されているように强制動員の對象者は韓國南部農村から動員され、1944年になって北部からの動員が實施された。これは韓國南部農村の「過剰人口」を勞働動員對象者にすることによって農村の生産性を上げて、日本への米の移出擴大を図り、「過剰」とされた小作農民を勞働者として日本國内に動員して日本の勞働者不足を補うという２つを狙いとしていた。しかし、朝鮮農村の勞働者不足は深刻になり、次第に强制性を强めていった。1944年は日本の要求によって日本國内への動員だけで最低でも29万人が送り出されることになった。この時期になると朝鮮總督府の政務總監でさえ、44年4月の道知事對する指示で「强制供出」の事實を認め、動員を督勵しているのである。この年には徵兵も

實施され、兵士、軍屬として、あるいは勞働目的の農耕隊、船舶兵としての動員も加わった。44年末には日本からさらに10万人の動員要請があった。この年、最も少なく見積もっても50万人前後の韓國人が軍と日本に動員された。强制動員の歴史の中で最大の動員數になったのである。

すでに勞働者不足が深刻になり、徵用から逃れる行動も目立っていたが、總督府は警察を中心にする抑壓体制と名目的な動員援護組織を作り對応しようとした。

1944年9月に朝鮮總督府は「勤勞動員援護會」を設立し「勤勞援護・動員協力」などを目的とした団体を設立した。各道には勤勞援護相談所、勤勞報告會などが設置された。同年9月には行政組織も勞務課から勤勞動員課とされた。しかし、これらの組織は形を整えただけのものであった。最も機能していたのは警察の取締で逃亡、徵用忌避などに對しては44年10月に京畿道警察部長は「徵用を忌避するものは斷固取締をする方針である」としている。全羅南道では徵用令違反者の一齊檢束を行い、「目下多數の容疑者を取り調べて」いると報道されている。動員は文字道り「强制動員」であった。なお、この年に日本國内韓國人勞働者の勞働現場では新しい動きもあった。愛知縣内で働いていた韓國人勞働者を重要産業である福岡縣の炭坑に二重徵用者として送り込んだり、「京城」出身の學生を中心とした徵用者を福岡縣三井田川炭坑に動員した。さらに新たに日本國内の軍の直轄工場にも徵用者が動員されている。勞働者不足の深刻化を反映したものである。こうした日本への動員の事實を日本人の大半は理解していない。しかし、日本人にとってさらに大きな問題はこれまで補償問題の對象外とされてきた韓國内部での勞働動員である。

## 4。韓国内労働動員

1944年度は軍事的に追いつめられた日本にとって韓國は重要な意味を持っていた。工業物資動員、大陸からの輸送ルートの確保、米の增産し、日本へ移送すること、軍事基地としての役割の增大などである。この年作成された日本政府の文書によればこの時期の朝鮮内の勞働需給を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從來採りきたる官の强力なる斡旋をもってするも勞務の充足意の如くならざるをもって强力なる勤勞動員体制を急速に整備するとともに、國民徵用令を全面的に發動し、

これが充足を図ることとなるも、なお、容易ならざる現況なり」

としている。

先に見た日本への强制動員に加えて1944年に韓國内で動員を予定されていたのは合計871,000人にも達する。

| 動員場所 | 道内動員必要数 | 道外動員必要数 |
|---|---|---|
| 工場 | 45,000 | 25,000 |
| 鉱山 | 173,000 | 20,000 |
| 土建 | 501,000 | 60,000 |
| 交通運輸 | 22,000 | |
| 林業 | 21,000 | |
| 計 | 766,000 | 105,000 |

この動員がどの程度實施されたかは明らかではないが、可成り强制的な動員が實施されたと考えられる。これについては各道知事の發言があるが全羅北道知事は14歳以上は全て勤勞報告隊員とすること、特に19～30歳までの男女で特別勤勞報國隊を組織すること、農工には女子・老人・子どもを当てること、道内動員には体力の比較的弱いもの、西北鮮および内地（日本）行きのものは最も强健なものを振り向ける、と發言している。各道で方針を出して動員体制を整えているのである。各道でどのように韓國内動員されていたか、については個別事例をあげることが出來るが全体としての統計的な數字は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動員され被害にあつた人も多く存在すると考えられるがこれからの研究が課題である。日本はこの國内動員者についても强制動員の範疇の中で考え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なお、總督府は10年以上に亘り、朝鮮農民を滿州移民として家族單位で毎年2千戸前後を南部各道から送り込んでいる。これらの人々も强制動員と同等の處遇を行うべきであろう。

## 5。おわりに

戰時下の韓國内では强制動員された勞働者に限らず、農民の米などの生産物の供出ま

で天引き强制預金、國債購入などが强制された。これらの預金の大半はインフレの進行に伴ってその価値は失われた。全ての韓國人に大きな被害を与えたのである。また、戰時動員による勞働力の不足などから1942～44年には3年連續の凶作となり、食糧事情は極端に惡くなり、青少年の体力が著しく惡化した。韓國民衆に著しい生活難をもたらした。强制動員勞働者と軍人・軍屬の殘された家族は一層困難な生活を强いられた。また、戰時下の動員、收奪によって韓國の戰後建設にも大きな障害になっていた。

しかし、こうした戰時下の狀況は日本人にはほとんど知られていないし、調査・研究も一部の民間で行われているにすぎない。韓國人は体驗として知っているが、日本の戰時下に關する認識は希薄である。この差を埋めることが强制動員被害未補償問題解決の近道の一つであろう。

先にもふれたがドイツではアウシュビッツの事實を國民が知り、補償が實現しているが、日本はそれに相当する韓國の戰時下の狀況について無知であることが問題なのである。

これは日本の36年間に亘る强占期全体の問題解明と密接に結びつけ、歴史認識の課題として位置づ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示唆しているのである。

こうした研究集會が開催され、事實を解明する作業を積み重ねて、問題の解決につなげていきたい。また、日本國内でも强制動員の加害の事實を知らせる努力を續けていきたい。

# 전후 조선인 유골실태 및 일본인 유골수집 사례

도노히라 요시히코
(殿平善彦, 강제연행·강제노동희생자를
생각하는 홋카이도 포럼 공동대표)

## 1. 전후에 남겨진 조선인희생자 유골

전시 하에 강제동원 된 조선인은 조선 내외를 포함하여 8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군인・군속으로 동원된 사람은 26만명(竹内康人), 기업에 의해 일본 국내로의 동원이 약 70만명이라고 한다.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전후 66년간의 시간은 유골의 존재를 조금씩 풍화시켰고, 개별적으로 보관, 유지되었던 유골은 합장되거나, 매장된 채 썩어가는 유골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골은 계속 남았다. 이것은 일본과 한국, 조선, 중국 등에서 일어난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적 화해를 실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 온 일본 정부와 기업, 일본인의 오늘날까지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2004년 12월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희생자 유골문제가 논의되었다. 하지만 유골문제가 정부 간의 의제로 논의된 것도 6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에 대해 한일 양정부의 책임이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 겨우 활동하기 시작한 강제동원희생자 유골문제이지만 군인・군속의 봉환은 추진되었으나 기업이 동원한 희생자 유골반환은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골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계자들은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 육친의 유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유족들도 있을 것이다. 유골문제 해결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2. 홋카이도[北海道] 희생자의 유골조사와 발굴의 경위

강제동원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기타규슈(北九州) 탄광지대와 홋카이도(北海道)였다. 홋카이도에 약 15만 명의 연행자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홋카이도와 조선인노동자)

홋카이도 각지에 조선인희생자 유골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탄광과 댐공사가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사루후쯔무라(猿拂村) 아사지노(淺茅野) 信膧寺는 아사지노 구 공동묘지에서 조선인희생자 유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을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발굴을 시도해보았다. 호로카나이쵸(幌加內町) 슈마리나이(朱鞠內)의 고켄지(光顯寺)에서는 신도들이 댐공사 희생자 위패를 돌보고 있다.

모두 그 지역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생각한 기억에서 계승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의 결과가 가져온 죽음의 의미와 유골을 기다리는 가족의 마음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희생자 유골 존재를 일본 시민이 알게 된 것은 1970년 초 홋카이도 기타미(北見) 지방에서 시작된 민중 발굴 운동이었다. 홋카이도에서 전전, 전후에 숨겨진 역사를 조사하는 운동은 지금까지 지역에서만 기억되어 온 희생자의 존재를 많은 일본인들 앞에 확인시켰다.

1976년에는 재일거류민단의 노력으로 한국 천안 교외에 망향의 동산이 조성되었고 일본 국내에서 사망한 한국인 유골을 모시게 되었다. 민단이 조사해서 수집한 유골은 망향의 동산에 매장하였지만 유골을 찾아 유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노력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 소라치(空知)민중사강좌가 진행해온 홋카이도 슈마리나이 우류(雨龍)댐 공사희생자 유골 발굴은 1980년부터 4차례 이루어졌고 16구가 발굴되었다.

1982년에는 도노히라(殿平)와 미야가와(宮川) 두 승려가 한국 희생자 유족을 대면하러 갔었지만 유족들은 일본이 전후 보상이 없었다는 것을 강하게 추궁하여 유골을 봉환할 처지가 아니었다.

## 3. 90년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

1990년대에 들어 한국의 민주화와 일본의 시민운동이 성장하는 가운데 양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역사화해에 대한 노력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홋카이도에서는 1997년에 일본과 한국, 재일한국・조선인 젊은이들이 한일 공동워크숍을 시작하여, 홋카이도 슈마리나이에서 희생자 유골 발굴에 힘썼다. 그 이후 워크숍은 여름과 겨울 연 2회의 모임이 매년 계속되었고, 15년간 2,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만나 유골발굴을 경험하며 국경을 넘는 우정을 키워가고 있다. 현재 15년간의 교류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발굴과 화해」(약칭)가 제작 중이다.

## 4. 한일 정치과제가 된 유골문제

2002년 12월 니시혼간지(西本願寺) 삿포로(札幌)별원에 101구의 아시아에서 강제연행된 희생자 유골이 있다는 것이 공표되었고, 2003년 2월 유골문제를 해결 목표로 시민운동단체 '강제연행・강제노동 희생자를 생각하는 홋카이도 포럼'이 출범했다. 2004년 12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강제동원희생자 유골문제가 거론되고 '한국, 조선의 유족과 함께 전국연락회' 등 유골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노력이 진행되었고, 일본 국내와 홋카이도 각지에 미반환 유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홋카이도 포럼과 조동종(曹洞宗), 사루후쯔무라 마을 사람들은 2005년 사루후쯔무라 아사지노 구공동묘지 시굴 후 3번에 걸쳐 발굴 사업을 하였고, 39구의 유골을 발굴했다. 발굴된 유골은 하마돈베쓰(浜頓別町) 덴유지(天祐寺)에 안치되었다. 2008년에는 유족의 강한 요청으로 홋카이도 포럼과 홋카이도 시민의 노력, 한국 봉은사의 협력으로 4구의 유골이 한국 유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유골반환은 일체 진전되지 않았다.

## 5. 유골문제 해결의 전망

조선인 강제동원희생자 유골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이 전쟁과 식민지지배의 과거에 대한 아시아 각국과 민중에게 사죄, 보상하고 화해하려는 노력을 태만히 한 것의 상징이고 가장 큰 책임은 일본 정부와 관련 있는 기업에 있다. 그러나 시민들도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과 같이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오히려 시민의 노력이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① 역사화해를 둘러싼 한일 시민운동과 종교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한층 더 넓히고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시민과 종교자들의 협동이 왕성해짐으로 역사의 진상을 밝히고 유골 봉환의 나갈 길을 제시하여 국가보다 앞서 민중들의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② 일본의 식민지주의와 레이시즘(racism)을 극복한 자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국내에서는 내셔널리즘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우익적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도 거기에 편승하여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크라임(hate crime)의 편에 서서 조선학교의 수업료 무상화를 중지한 채 있다. 양국의 시민과 종교자가 손을 모아서 식민지주의에 반대하고 헤이트 크라임에 항의하는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유골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확실히 할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유골이 오기를 기다리는 유족은 고령화되고 유족의 기대에 응답하지 못하고 시간은 지나가버릴지도 모른다. 현재 홋카이도에는 하루라도 빨리 유족에게 돌려보내야 할 유골이 존재한다. 정부의 해결이 늦어진다면 시민과 종교인이 솔선하여 반환을 실천하고 정부와 기업을 촉구하면서 유골을 반환할 방법을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다.

④ 홋카이도에는 새로운 강제동원희생자 매장증언이 전해졌다. 홋카이도 포럼에서는 올해 여름 아시베쓰시(芦別市) 아시베쓰강 주변의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 발굴계획이 확정된다면 한국 정부를 비롯해 한일 각 방면의 지원을 구해 새로운 발굴을 시도하고 싶다.

# 홋카이도의 유골문제 진행현황

■ 홋카이도 포럼 결성 이전의 유골반환 상황

| | 반환자 | 반환처 | 유골수 | 비고 |
|---|---|---|---|---|
| 1948~49년 | 기업 | 불명 | 70 | 반환사실불명 |
| 1977년 | 한국민단 | 망향의 동산 | 254 | 사원안치유골 |
| 1992년 2월 | 소라치(空知)민중사강좌 | 유족·망향의 동산 | 2 | 발굴유골 |
| 1995년 | 소라치(空知)민중사강좌 | 망향의 동산 | 8 | 발굴유골 |
| | 한국민단 | 망향의 동산 | 2 | 사원안치유골 |
| 1997년 | 한국방송국 | 유족 | 1 | 사원안치유골 |
| 계 | | | 337 | |

■ 홋카이도 포럼의 유골 반환 상황

| | 반환자 | 반환처 | 유골수 | 비고 |
|---|---|---|---|---|
| 2008년 3월 | 홋카이도포럼 | 유족·망향의 동산 | 4 | 무로란(室蘭), 아카비라(赤平) 사원 안치 유골 |
| 計 | | | 4 | |

■ 니시혼간지(西本願寺) 삿포로(札幌) 별원에 안치된 유골

2002년 12월 6일, 혼간지(本願寺) 삿포로(札幌)별원 조도신종(浄土眞宗) 혼간지파(本願寺派)는, 동원 내에서 발견된 강제연생희생자 합장유골 101구와「유골유류품정리부」의 소재를 내외에 공표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유족을 조사하고 유족 의향에 맞게 유골반환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 삿포로별원 합장유골 분류 (정리부에서)

| | |
|---|---|
| 유골 | 87 |
| 유골 · 유류품 | 1 |
| 유류품 | 13 |
| 합계 | 101 |

※ 본적지가 기재된 자

| | | |
|---|---|---|
| 기재 80명 | 한국 | 61 |
| | 조선 | 13 |
| | 중국 | 6 |

※ 본적지 미기재된 자

| | | |
|---|---|---|
| 미기재 21명 | 한국·조선 | 11 |
| | 중국 | 0 |
| | 일본 | 10 |

■ 홋카이도 포럼이 확인한 미반환 유골 (2002~2012년 3월까지 조사)

| | 장소 | 유골수 | 형태 | 유족 확인 | 비고 |
|---|---|---|---|---|---|
| 1980 ~2001년 | 슈마리나이(朱鞠内) | 4 | 매장을 발굴 | | 소라치민중사강좌 |
| 2002년 | 삿포로별원 | 101 | 사원합장안치 | 33 | |
| 2003년 | 泊法輪寺 | 8 | 사원합장안치 | | |
| 2004년 | 무로란(室蘭) 光昭寺 | 3 | 사원개별안치 | 3 | 08년 반환 |
| | 비바이(美唄) 常光寺 | 6 | 사원개별안치 | 1 | |
| | 네무로(根室) 大徳寺 | 2 | 사원개별안치 | 1 | |
| 2005년 | 아카비라(赤平) 宝性寺 | 1 | 사원개별안치 | 1 | 08년 반환 |
| 2005 ~2010년 | 아사지노(浅茅野) 구공동묘지 | 39 | 매장 발굴 | 0 | |
| 2011년 | 히가시카와(東川) 聞名寺 | 2 | 사원개별안치 | | |
| 계 | | 166 | | 39 | 4구 반환 |

# 戦後朝鮮人遺骨実態及び日本人遺骨収集事例

殿平善彦(強制連行･強制労働犠牲者を
考える北海道フォーラム共同代表)

## １。戦後に残された朝鮮人犠牲者の遺骨

戦時下に強制動員された朝鮮人は朝鮮内外を入れると800万人近いといわれる。軍人・軍属として動員された人は26万人（竹内康人氏）、企業による日本国内への動員が約70万人と言われる。

多くの犠牲者があったが、戦後66年の日々は、遺骨の存在を少しづつ風化させ、個別性の保持された遺骨は合葬に付されたり、埋葬されたまま朽ちていった遺骨も少なくないだろう。にもかかわらず、遺骨は残り続けた。それは、日本と韓国、朝鮮、中国などにおける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の過去を清算し、歴史和解を実現する努力を怠ってきた日本政府と企業、日本人の今日までを象徴する存在である。

2004年12月の日韓首脳会談において、強制動員犠牲者の遺骨問題が論議されたが、遺骨問題が政府間の議題に上るのに60年を要したことに日韓両政府の責任が問われるだろう。

ようやく動き出した強制動員犠牲者の遺骨問題であるが軍人軍属の遺骨奉還は進んだが、企業に動員された犠牲者の遺骨返還は一向に進展を見せない。遺骨の返還のないまま、関係者は高齢化している。肉親の遺骨を受け取らないまま命終えてゆくご遺族もいるだろう。

遺骨問題の解決は、なおざりにできない喫緊の課題である。

## ２。北海道における犠牲者の遺骨調査と発掘の経緯

強制動員の最も多かった地域は、北九州炭鉱地帯とともに、北海道だった。北海道に約15万人の連行者があったと報告されている（北海道と朝鮮人労働者）。

北海道の各地に朝鮮人犠牲者の遺骨が残されていることは、炭鉱やダム工事が行われた地域の人々が知るところだった。猿払村浅茅野の信証寺住職は浅茅野旧共同墓地に朝鮮人犠牲者の遺骨が残されていることに気づき、村の有志とともに発掘を試みた。幌加内町朱鞠内の光顕寺では、檀家の人々によって、ダム工事犠牲者の位牌が護られてきた。

いずれも地域の人々の死者を思う記憶に刻まれ、記憶は継承されてきた。しかし、植民地支配の結果もたらされた死の意味と、遺骨を待つ遺族の思いにまで想像を働かせることは難しかった。

犠牲者の遺骨の存在を日本の市民が気づくのは、北海道においては1970年はじめに北見地方で始まった民衆史堀掘り起こし運動である。北海道の戦前、戦後の隠された歴史を調査する運動は、それまで、地域にだけ記憶され続けてきた犠牲者の存在を多くの日本人の前に明らかにした。

1976年には在日居留民団の努力で韓国天安の郊外に望郷の丘が造成され、日本国内で死亡した韓国人の遺骨が納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民団が調査して集めた遺骨は、望郷の丘に埋葬されたが、遺族を探してお返しする努力にはいたらなかった。

私たちの空知民衆史講座が取り組んだ北海道朱鞠内における雨竜ダム工事犠牲者の遺骨発掘は1980年から4回行われ、16体が発掘された。

1982年には、殿平と宮川の二人の仏教僧侶が、韓国の犠牲者遺族に面会に行くが、面会した遺族からは、日本の戦後補償がないことを厳しく追及され、遺骨を奉還するどころではなかった。

## 3。90年代日韓関係の新たな時代

1990年代に入り、韓国の民主化と日本の市民運動の成長のなかで、日韓における植民地支配への反省と歴史和解の取り組みは新しい時代を迎える。

北海道においては、1997年に、日本と韓国、在日韓国・朝鮮人の若者たちによる、日韓共同ワークショップが始まり、北海道朱鞠内での犠牲者遺骨発掘が取り組まれた。その後、ワークショップは夏と冬の年2回の集まりが休むことなく続けられ、15年間で2000人以上の青年たちが出会い、

遺骨発掘を経験し、国境を超えた友情を育んできた。今、15年間の交流を描いた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発掘と和解」（仮称）が製作中である。

## ４。日韓の政治課題となった遺骨問題

2002年12月、西本願寺札幌別院に101体のアジアからの強制連行犠牲者の遺骨が置かれていることが公表され、2003年2月に、遺骨問題を解決する目標を持った市民運動体「強制連行・強制労働犠牲者を考える北海道フォーラム」がスタートした。2004年12月の日韓首脳会談において、初めて強制動員犠牲者の遺骨問題が取り上げられ、「韓国・朝鮮の遺族とともに全国連絡会」など、遺骨問題への市民の取り組みが進み、日本国内や北海道各地に未返還の遺骨が存在す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北海道フォーラムと曹洞宗、猿払村民は2005年の猿払村浅茅野旧共同墓地の試掘の後、3度にわたる発掘事業を経て、39体の遺骨を発掘した。発掘された遺骨は浜頓別町天祐寺に安置されている。2008年には遺族の強い要望により、北海道フォーラムや北海道の市民の努力と韓国奉恩寺の協力で4体の遺骨が韓国の遺族にお返しされた。しかし、日本政府からの犠牲者遺族への謝罪と遺骨返還は一向に進まない。

## 5。遺骨問題解決への展望

朝鮮人強制動員犠牲者の遺骨問題を解決できないのは、日本が、戦争と植民地支配の過去を巡って、アジアの諸国と民衆に謝罪し、補償し、和解する取り組みを怠ってきた象徴であり、もっとも大きな責任は日本政府と関係する企業が負わねばならない。しかし、市民の側もアジアの人々にたいして、日本政府や企業とともに責任を共有している。むしろ、市民の努力が、政府や企業の責任を果たす姿勢を導き出すのではないか。そのために

① 歴史和解を巡る日韓の市民運動や宗教団体の連携と協力を一層広げ、高めることが必要である。国際的な市民や宗教者の協働が進むことで、歴史の真相を明らかにし、遺骨の奉還

への道筋を示し、国家に先立って民衆の和解を進めることが出来る。

② 日本の植民地主義とレイシズムを克服する自覚的な取り組みが必要である。日本国内では、ナショナリズムを背景にした新たな右翼的言説が生まれつつある。日本政府もその波に乗りながら、在日韓国・朝鮮人へのヘイトクライムに手を貸し、朝鮮学校への授業料無償化を差し止めたままである。両国の市民と宗教者が手を合わせて植民地主義に反対し、ヘイトクライムに抗議する運動を進める事が重要だ。

③ 遺骨問題の解決のための具体的な道筋を明らかにする努力が必要である。政府と企業に責任を果たすよう求めるだけでは、遺骨の帰りを待つ遺族は高齢化し、遺族の願いに応えられずに時間が過ぎ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現に北海道には一日も早く遺族に還されるべき遺骨が存在する。政府が解決を遅らせるなら、市民と宗教者がイニシャチブを取って返還に向けて行動し、政府や企業を促しつつ、遺骨を奉還する取り組みを計画することも必要である。

④ 北海道には新たな強制動員犠牲者の埋葬証言が伝えられている。北海道フォーラムでは今夏、芦別市の芦別川河畔の発掘を計画している。発掘計画が確定するなら、韓国政府をはじめ、日韓の各方面の支援を求め、新たな発掘に取り組みたい。

# 北海道における遺骨問題の取り組み現況

■ 北海道フォーラム結成以前の遺骨返還状況

| | 返還者 | 返還先 | 遺骨数 | 備考 |
|---|---|---|---|---|
| 1948~49年 | 企業 | 不明 | 70 | 返還の事実不明 |
| 1977年 | 韓国民団 | 望郷の丘 | 254 | 寺院安置遺骨 |
| 1992年 2月 | 空知民衆史講座 | 遺族・望郷の丘 | 2 | 発掘遺骨 |
| 1995年 | 空知民衆史講座 | 望郷の丘 | 8 | 発掘遺骨 |
| | 韓国民団 | 望郷の丘 | 2 | 寺院安置遺骨 |
| 1997年 | 韓国ＴＶ局 | 遺族 | 1 | 寺院安置遺骨 |
| 計 | | | 337 | |

■ 北海道フォーラムによる遺骨返還状況

| | 返還者 | 返還先 | 遺骨数 | 備考 |
|---|---|---|---|---|
| 2008年 3月 | 北海道フォーラム | 遺族・望郷の丘 | 4 | 室蘭、赤平寺院安置遺骨 |
| 計 | | | 4 | |

■ 西本願寺札幌別院に置かれている遺骨

2002年12月6日、本願寺札幌別院（浄土真宗本願寺派）は、同寺院内から発見された強制連行犠牲者の合葬遺骨101体と「遺骨遺留品整理簿」の所在を内外に公表した。併せて、早急に遺族を調査して遺族の意向に沿い遺骨返還を進める意向を明らかにした。

※ 札幌別院合葬遺骨分類（整理簿による）

| | |
|---|---|
| 遺骨 | 87 |
| 遺骨・遺留品 | 1 |
| 遺留品 | 13 |
| 合計 | 101 |

※ 本籍地が記載されているもの

| | | |
|---|---|---|
| 記載 80明 | 韓国 | 61 |
| | 朝鮮 | 13 |
| | 中国 | 6 |

※ 本籍地未記載

| | | |
|---|---|---|
| 未記載 21名 | 韓国･朝鮮 | 11 |
| | 中国 | 0 |
| | 日本 | 10 |

■ 北海道フォーラムが確認した未返還遺骨（2002年～2012年3月までの調査）

| | 場所 | 遺骨数 | 形態 | 遺族確認 | 備考 |
|---|---|---|---|---|---|
| 1980<br>～2001年 | 朱鞠内 | 4 | 埋葬を発掘 | | 空知民衆史講座 |
| 2002年 | 札幌別院 | 101 | 寺院合葬安置 | 33 | |
| 2003年 | 泊法輪寺 | 8 | 寺院合葬安置 | | |
| 2004年 | 室蘭光昭寺 | 3 | 寺院個別安置 | 3 | 08年 返還 |
| | 美唄常光寺 | 6 | 寺院個別安置 | 1 | |
| | 根室大徳寺 | 2 | 寺院個別安置 | 1 | |
| 2005年 | 赤平宝性寺 | 1 | 寺院個別安置 | 1 | 08年 返還 |
| 2005<br>～2010年 | 浅茅野旧共同墓地 | 39 | 埋葬を発掘 | 0 | |
| 2011年 | 東川聞名寺 | 2 | 寺院個別安置 | | |
| 計 | | 166 | | 39 | 4体 返還 |

# 난징대학살진상조사

두안 웨핑(段月萍,
전 난징대학살조난동포기념관 부관장, 연구원
난징대학살역사연구회 원 부비서장, 현 이사)

난징대학살의 진상에 대해서는, 국제안전구 구성원 진링대학 교수 루이스·C 스미스 및 그 보조원이 1937년 2월부터 1938년 2월에 걸쳐, 난징시민이 일본군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1938년 6월에《난징전화앨범(南京戰禍寫眞)》을 출판하였다. 책은 난징시민이 당한 학살과 재산, 농작물의 손실정황을 기재하였다. 이는 난징대학살이 발생한 후 얼마되지 시점에서 진행한 조사이자 일본군 폭행에 대한 진실된 역사기록이다. 그외 당시 난징대학살 기간 난징도성(道胜)교회 목사·난징국제안전구위원회 위원·국제홍십자회 난징분회 주석이었던 마길 목사는 16밀리미터 카메라로 일본군의 난징대학살 및 폭행의 현장사진과 화면을 기록하였다. 이것 역시 난징대학살의 실제 기록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전쟁 후 극동국제군사법정과 난징심판전범군사법정에서 일본전범을 심판하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항일전쟁 승리 후, 일본전범을 심판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일본군 난징대학살 죄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1945년 11월 7일, 난징시정부, 수도지방법원, 수도경찰 홍완(卍)자회 난징분회 등 14개 기구 단체 대표들은 수도지방법원에서 연합회를 소집하여 '난징죄행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난징시 정부는 각 구(區), 향(鄉), 진(陣), 방(坊), 보(堡), 갑(甲) 등 구역에서, 수도 경찰청은 각 구(區), 국(局), 소(所) 등 구역에서 각기 난징대학살 일본군 죄상을 조사하였다. 1946년 6월 23일, 난징시 임시참의회는 동경극동국제군사법정과 난징중국국제부 심판전범군사법정의 일본전범 심판에 협

조하기 위하여 특별히 '난징대학살사건일본군죄행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난징대학살일본군죄행조사위원회'는 난징 13개구에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면적인 일본군 죄상의 증거를 수집·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각 구의 구장이 책임지고 지휘하였고, 난징시 임시참의회에서는 참의원 인원을 구에 파견하여 이를 지도하고 독촉하였다. 또한 난징시 임시참의회와 '난징대학살사건일본군죄행조사위원회'가 동시에 공고를 발포하여 난징시의 온 시민이 조사에 호흡을 맞추기를 호소하였다. 조사는 1946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의 난징시 함락시기, 난징에 남아 있었던 시민에 대한 개별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 2,784건에 달하였다. 조사결과, 즉 '피해인 사상 통계표', '일본군 죄행 각종 통계표',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피해인의 주소와 성명 통계표', '난징대학살사건서술보고서' 등이 국민당 정부에 보고되었고, 동경극동국제군사법정과 중국심판전범군사법정(동맹국 법정 중의 하나)에 제공되어 일본전범을 심판하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난징대학살사건은 동경국제군사법정과 중국심판전범군사법정의 심판을 거친 뒤 이미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은 1982년에 역사교과서를 의도적으로 고치고 또한 '중국침략'을 '중국진입'으로 고쳐 중국침략을 부인하고 난징대학살사실을 부인하였다. 일본 우익세력의 소란은 중국인민, 30여만명이 학살당한 난징시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난징시민은 난징시 인민정부에 피해를 입은 30여만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역사를 편집하고 기념관을 설립하고 비석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난징시 인민정부는 이러한 시민의 염원에 호응하여 관련 사무실을 설립하고 당시 시장 장요화(張耀華)를 지도자로 임명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조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1) 난징대학살 역사자료 수집

일본군의 난징대학살 시 난징에 남아 있던 많은 외국 인사들은 직접 난징대학살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일기, 수기, 책, 편지, 기사, 신문보도, 사진과 영상 등의 방식으로 일본군의 학살, 약탈, 소각, 간음 등의 폭행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직접 목격한 기록자료들은 중외 기록보관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난징시에서는 전문인원을 파견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2) 난징대학살 생존자 방문조사

생존자 방문조사는 난징시 정부가 주관하여 전 난징시 6개구 3개현에서 전면적으로 전개되었다. 1984년 3월부터 6월까지 전 시의 구(區), 가두(街道) 거주민위원회 등은 조사팀을 설립하여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중 생존자들은 '난징대학살생존자·피해자·목격자 조사표'에 이름, 성별, 주소, 피해정황 등을 상세히 기재하였다. 또한 조건이 허락되는 팀은 생존자에 대해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여 영구한 자료로 남겼다. 여러 방면의 노력을 거쳐 생존자 1,756명을 방문조사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일본군의 집단학살인수가 비교적 많은 중산(中山)부두, 메이탄항(煤炭港), 옌즈지(燕子磯), 초우세샤(草鞋峽) 등의 지역에서 살아남은 노인들을 방문조사하였다. 그들의 몸에는 아직도 상처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살아 있는 역사증인으로, 우리는 이들을 위해 이를 영구적인 자료로 보존하였다.

(3) 영원한 기념관 건립

난징시 인민정부는 시민들을 교육하고 역사를 명기하며 미래를 전망하고 번영부강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념관을 설계하고 난징대학살의 역사를 전시하여 역사적 사실로 시민을 교육하여 세계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난징시 정부는 기념관을 난징대학살 당시 일본군이 다수의 중국인을 학살한 장소였던 쟝둥먼(江東門) 유적지에 건설되었다. 여기는 당시 만여명의 피해자 유골이 파묻힌 곳이다.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피해자 유골이 발견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념관은 1994~1995년과 2005~2007년 두차례의 확장건설을 거쳐 지금은 전체 면적 7.4만평, 건축면적 2.5만평, 전람면적 1.2만평의 규모를 이루고 있다. 기념관이 소유한 소장품은 15만건에 달하고 그중 유물은 2만5천건에 달한다. 현재 기념관은 국가 1급박물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4) 난징시 일본군학살 주요지점에 추도비 건립

난징시에 중산(中山)부두, 메이탄강(煤炭港), 초우세샤(草鞋峽), 옌즈지(燕子磯), 한중문(漢中門), 칭량산(淸凉山), 진링(金陵)대학(지금의 난징대학), 상신허(上新河), 쉔우먼(玄武門), 두웅죠(東郊) 등 19곳의 일본군 집단학살지점에 추도비를 건립하였다. 각 추도비가 위치한 장소에서는, 일본군이 난징을 함락한 날인 12월 13일에 매년 기념행사

가 진행되고 있다.

난징대학살조난동포기념관은 1983년 12월에 기획하여 1985년 8월 15일 항전승리 40주년 기념일에 건설, 민간에 개방하였다. 건설 후 지금까지 27년 동안, 기념관 참관 인수는 3,677만명에 달한다. 기념관 전시 외에 또한 기념관은 연구원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 파견하여 난징대학살 관련 역사자료와 유물을 수집하였고, 다수의 난징대학살 관련 역사자료 서적과 화보들을 연구·편집하였다. 또한 난징대학살연구회를 설립하고 전문가, 학자를 조직하여 난징대학살진상의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난징대학살생존자원조회'를 설립하여 계속해서 생존자를 방문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방문조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난징대학살 생존자의 구술 자료를 수집·편집할 것이다. 이외에 생존자의 생활, 의료 등의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다. 난징대학살 생존자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있다. 현재 생존자는 불과 200여명에 달할 뿐이다. 이렇게 소중한 목격자들에 대해 반드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4월 4일, 중국의 청명절날 기념관에 난징대학살역사연구회(생존자)구술사분회를 성립하고 국제구술사 규범과 표준에 따라 생존자의 구술자료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여, 구술사 조사의 질을 보증하였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우리의 역사적인 책임이다.

# 南京大屠杀真相调查

段月萍
（系原侵华日军南京大屠杀纪念馆副馆长，副研究员，
原侵华日军南京大屠杀史研究会秘书长，现理事）

侵华日军南京大屠杀的真相，早在1937年12月至1938年2月由当时国际安全区成员、金陵大学教授路易斯·S·C史密斯及其助手对南京市民遭受日军暴行情况下做了调查，并于1938年6月出版了《南京战祸写真》一书。该书记载了南京市民和农村遭受的屠杀及其财产、农田作物的损失情况，它是南京大屠杀发生后不久就进行的调查，是日军暴行真实的历史记录。除此之外，当年南京大屠杀时，南京道胜教堂牧师、南京国际安全区委员会委员、国际红十字会南京分会主席马吉牧师用16毫米的摄像机偷偷拍摄了日军南京大屠杀暴行的现场照片和画面，这也是日军南京大屠杀的在真实记录。这些当年的第一手资料战后在东京国际军事法庭和南京审判战犯军事法庭作为审判日本战犯的罪证之一出示在法庭上。

抗日战争胜利后，为了审判日本战犯，中国政府即开始进行侵华日军南京大屠杀罪行全面调查。1945年11月7日，南京市政府、首都地方法院、首都警察厅暨红卐字会南京分会等14个机构团体代表，在首都地方法院联合召开会议，成立南京敌人罪行调查委员会，决议由南京市政府推动各区、乡、镇、坊、保、甲，由首都警察厅推动各区、局、所，分别负责南京大屠杀日军罪行调查。1946年6月23日，南京市临时参议会为配合东京远东国际军事法庭与南京中国国际部审判战犯军事法庭审判日本战犯的工作，还特别组织南京大

屠杀案敌人罪行调查委员会，专司调查统计工作。

南京大屠杀案敌人罪行调查委员会在南京13个区设置区调查小组委员会，全面负责侵华日军各项罪行罪证之搜集、调查、统计与汇报，由各区区长负责指挥。南京市临时参议会选派参议院人员赴各区指导督促。南京市临时参议会、南京大屠杀案调查委员会同时发布公告，号召全市市民配合调查。调查工作从1946年6月起至11月止，共计六个月，重点是对沦陷时其滞留南京的市民进行个案调查。计有确实认证之案件共2784案，并将调查结果之被害人伤亡统计表、侵华日军罪行各类统计表、可出庭作证被害人住址姓名表、南京大屠杀案件述要等呈报国民党政府，分别提供东京远东国际军事法庭和中国审判战犯军事法庭（同盟国法庭之一），作为审判日本战犯之证据。

南京大屠杀案，经过东京国际军事法庭和中国审判战犯军事法庭审判后，已成为历史的铁证。但是日本文部省又于1982年篡改历史教科书，把“侵略中国”改为“进入中国”，否认侵略中国，否认南京大屠杀事实。日本右翼的叫嚣，激起了中国人民，特别是被屠杀了30多万人的南京市民的无比愤怒，纷纷要求南京市人民政府对被害的30万同胞展开调查，为他们编史、建馆、立碑。南京市人民政府顺应人民的意愿，随即成立了“南京大屠杀编史、建馆、立碑”领导小组办公室，由当时的南京市长张耀华任领导小组组长，组织人力对侵华日军南京大屠杀的罪行展开调查。调查工作分四个方面进行：

（一） 搜集南京大屠杀的史料。日军南京大屠杀时，许多留在南京的中外人士亲眼目睹了日军的暴行，他们用日记、手记、书、信、纪实、新闻报导、图片以及影像等形式记载了日军的屠杀、抢劫、焚烧、奸淫等种种暴行。这些亲眼目睹的的记载都分散收藏在中外档案馆、图书馆等处。“编史、建馆、立碑”办公室即派专人到各地进行收集。

（二） 寻访南京大屠杀幸存者。这项工作由南京市政府主持，在全市6个城区，三个郊区/县全面展开。从1984年3月至6月，全市各区、街道、居民委员会都成立了调查小组，对60岁以上的老人进行逐个调查，凡是调查到的南京大屠杀的幸存者，都填写“南京大屠杀幸存者、受害者、目睹者”调查表，调查表详细登记姓名、性别、住址、受害情况等信息。有条件的

调查小组除填表外，还要对幸存者拍照、录音留作永久保存。经过各方面的努力，共寻访到1756位幸存者。特别是当年日军集体屠杀人数较多的中山码头、煤炭港、燕子矶、草鞋峡等处，都寻访到还活着的老人。他们的身上都留有枪伤和刀痕，他们是活着的历史见证人，我们为他们录音、录像、作为永久资料保存。

（三） 组织设计、建立一座永久性的纪念馆。南京市人民政府为了教育广大人民，铭记历史，展望未来，建设繁荣富强的中国，组织专家设计一座纪念馆，展示侵华日军南京大屠杀史实，用历史事实教育人民为保卫世界和平而努力。因此，市政府将纪念馆建在当年日军南京大屠杀江东门遗址之上。这里当年掩埋了1万多被屠杀的遇难者同胞遗骨，至今还挖掘出许多遗骨，让人看了触目惊心。纪念馆后经1994 1995年和2005 2007年两次扩建，占地面积达7.4万公顷，建筑面积2.5万平方米，展示面积1.2万平方米。馆藏品达15万件，其中文物达2.5万件。现在是中国国家一级博物馆。

（四） 在全市当年日军屠杀的主要地点建立纪念碑。全市在中山码头、煤炭港、草鞋峡、燕子矶、汉中门、清凉山、金陵大学（今南京大学）、上新河、玄武门、东郊等19处日军集体屠杀的地方建立了纪念碑。各处纪念碑在每年12月13日日本攻陷南京的日子，都举行悼念活动。

侵华日军南京大屠杀纪念馆于1983年12月开始筹建，至1985年8月15日纪念抗日战争胜利40周年时建成开放，开放至今27多年来参观的观众累积达3677万人。建馆之后，除进行正常的展出之外，我们还组织本馆研究人员到美国、日本、法国、丹麦等国搜集南京大屠杀史料和文物，研究编辑出版南京大屠杀史料丛书及南京大屠杀画册。我们还建立了南京大屠杀史研究会，组织专家、学者开展对南京大屠杀真相的学术研究。同时，我们还成立了南京大屠杀幸存者援助会，一方面継续调查寻访幸存者，多年来我们一直在进行着这项工作，并将搜集南京大屠杀幸存者的口述资料汇编成册；另一方面对南京大屠杀幸存者在生活、医疗等方面存在的困难给予援助。南京大屠杀幸存者随着年月的流逝，逐年减少，现在仍健在的仅有200名，对这些宝贵的活

见证人必须多加保护，为此，今年的4月4日，也就是中国传统的清明节这一天，我们在纪念馆成立了侵华日军南京大屠杀史研究会(幸存者)口述史分会，我们将按照国际上口述史的规范和标准，对幸存者的口述资料进行抢救性的整理，确保口述史的调查的高质量，这也是我们的历史责任。

# 과거사 극복 : 국가사회주의와 화해의 긴 여정[18]

## -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의 활동과 국제 협력 기구들 -

## (폴란드-독일 관계에 관한 특별 언급 포함)

귄터 자트호프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EVZ) 공동이사)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은 매우 늦게 설립되었다. 2000년이 되어서야 연방법은 본 재단의 설립을 촉구하였다. 본 재단의 설립취지는 독일이 오랫동안 부인해 왔던 국가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행해진 강제노동의 부당함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와 살아남은 희생자들이 겪은 고통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가에 있다. 국가사회주의 체제 기간 동안 자행된 부당함에 대한 책임을 독일 정부, 기업,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은 독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10년 넘게 벌어졌다. 강제노동을 통해 이득을 취한 독일 기업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은 마침내 본 재단을 설립하게 하는 정치적 돌파구로 작용하였다. 정부와 재계는 본 재단 설립에 총 51억 유로의 자본금을 조달해 주었다.

보상 지불 프로그램의 대상은 국가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위시한 98개 국가들의 170만 희생자들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구소비에트연방(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러시아)과 체코의 계승 국가들을 포함하여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가장 고통당한 해당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수행되었다. 동시에, 재단은 미래 세대를 위해 이 부당함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고, 살아남은 피해자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상호이해

18) 이 글은 2011년 12월 아산정책연구원, 주한독일대사관, 주한폴란드대사관 공동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된 '독일-폴란드 선린우호조약 체결 20주년과 한일 역사화해의 미래'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원고입니다.

및 오늘날의 인권보호를 촉진하는 국제 자금 프로젝트 수행을 위임 받았다. 따라서 본 재단의 역할은 이들 국가들과의 화해를 도모하고 우리 사회 상호 간 이해를 촉진시키는 독일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전개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왜 재단 설립은 늦게 이루어졌는가? 보상 지급 프로그램은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그리고 생존자 및 오늘날 우리 사회와 정부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들이 오늘 제가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들이다.

본론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언급을 하겠다:

I. 1933~1945년 사이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독일에 의해 자행된 범죄는 오늘날의 독일인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중 가장 중대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 전 유럽에 걸친 6백만 유대인 및 50만 집시들, 그리고 수백만 슬라브계 민족 학살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6천만 인구를 희생시킨 전쟁에 대한 책임, 그리고
- 독일의 캠프, 공공 기관, 산업 및 농업 분야로 강제로 이주되어 온 1천2백만 명의 강제노동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해되었으며, 강제노동자들 대다수는 폴란드와 구소비에트연방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국가사회주의 체제에 의해 시작된 전쟁은, 인간이 "지배자 민족"과 "피지배자 민족"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인종차별 개념을 갖고 있었다. 후자는 삶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개념에 의해 국가사회주의 체제는 "피지배자 민족"을 오로지 착취해야할 노동력으로만 보았다.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범죄를 통해, 독일은 "문명 국가의 가족(family of civilized states)" 그리고 인류 문명의 범주에서 스스로를 제외시켰다. 1945년 이후, 자신의 과거와 그 범죄를 들여다보면서 독일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했다: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우리가 이를 되돌릴 순 없는가? 이 모든 범죄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는 모두 국가 범죄인가 아니면 나라 전체의 잘못인가?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들에게 빚진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기억을 보존하고 "결코 다시는" 이라는 모토 아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인가?

독일은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채찍질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1945년 승리를 차지한 반대세력, 연합군에 의해서야 비로소 해방되었다. 이후 1945년과 1946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이 열렸고, 이와 비슷하게 일본에서는 1946~1948년 사이 도쿄에서 재판이 열렸다.

전후 독일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 냉전의 역학 관계에 휘말리게 되었다. 새로운 정치적, 심리적 권력 구조를 수반하였는데, 이는 독일 내에 철의 장막이 드리워진 유럽의 분단과 '새로운 적'의 이미지였다.

이는 모두 국가사회주의의 역사적 부당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독일인들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결과였다.

II. 반대로, 1940년대 말 이후 나치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등, 부당함에 맞서고자 하는 독일의 의지는 상당히 약해졌다. 이는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동맹을 필요로 했고, 구소비에트연방 역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동맹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1953년까지 구소비에트연방에 광범위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였고, 또한 구소비에트연방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폴란드에도 부분적인 배상을 하였다. 그러나, 이 독일 국가는 국가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자행된 잘못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냉전시대는 곧, 수년간 독일에서 수년간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부당함에 대한 내부적인 정치적 대립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독일에 의해 타격을 받았던 국가들이 이제는 구소비에트연방 하에서 공산주의 캠프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독일로 하여금 과거의 부당함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폴란드와의 관계 회복은 더욱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의 역할관계와 1970년대 이후 여러 정부와의 합의를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볼 시간이 많지 않다.

복잡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에서 독일은 다시금 역사 속에 뿌리 내린 의무에 직면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역사와 도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도덕적 자극제"를 단계적으로 찾기 위해 50년이 더 소요되었다.

수십 년 동안, 부당함에 대한 개념화 과정은 점차 가해자의 자기 정당화로부터 분리

되어, 당시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간의 학술 및 정치 토론에 의해 가시화되었.

1980년대 이후부터, 대량학살, 특히 홀로코스트와 반인륜 범죄에 대한 총체적 접근 방식의 논쟁이 이루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과 보상 및 사회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나치의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과정은 독일 국가의 관점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문화적, 정치적 성숙의 과정을 겪고 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1989년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냉전체제 하에서 독일은 나치의 부당함에 관련하여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었으나 1989년 말 소비에트 붕괴 이후 그들의 청구를 더 이상 거부하거나 묵살할 수 없었다.

50년 넘게 독일은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희생자들을 위한 “보상” 및 “배상”과 관련한 수많은 법조항과 금융제도를 만들어냈다. 1949~2010년까지, 독일연방공화국은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희생자들(혹은 그들의 자손들)에 680억 유로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불해 왔다.

하지만, 냉전체제로 인해, 초기 보상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독일 혹은 서유럽 국가들의 피해자들만이 해당되었고, 동유럽까지 범위가 미치지 못했다. 나치 의료실험의 피해자를 위한 몇몇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폴란드 및 기타 동구권 국가들의 희생자들은 독일의 배상법과 그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1989년 철의 장막이 무너진 이후에서야 폴란드 민주정부는 독일과의 첫 번째 배상 합의 준비가 된 유럽평화체제 하에서 자신의 주권 회복을 위해 독일과 협상에 들어갔다. 1991년 폴란드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희생자들을 위한 일시금 보상으로 독일로부터 50억 독일 마르크(2억 5,600만 유로)를 받았다. 하지만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강제노동자들을 위한 보상은 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본 재단 설립 이후에 해결되었다.

III.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은 반인륜적인 문제, 특히 국가사회주의 체제 하의 강제노동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독일 정부와 시민 단체의 해답이었다. 이는 또한 역사에 대해 학습할 방법이기도 했다.

연방법은 세 가지 정치 과제의 해결책으로써 2000년 재단 설립을 결정하였다. 첫째, 사회민주당·녹색당 연합은 “독일 기업과 관련된 강제 노동자들을 위한 연방 재단” 설

립을 주창하는 성명을 1998년 발표하였다. 둘째, 중부 유럽 국가들과 국제 유대인 단체들은 수년간 독일 보상법에서 배제되어 온 나치 치하 강제노동 문제를 강조하면서 1989년 이후 거센 압력을 행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제노동자들을 착취하거나 국가사회주의자들의 희생자들의 재산 몰수로 이득을 취한 주요 독일 기업들에 대한 공판이 미국에서 열렸다.

재단 설립 당시 51억 유로의 설립 기금은, 절반은 국가에서 절반은 민간 기업에서 조달되는 것이 "현대적인"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과거사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인 업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특정 요소들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지적하자면

a) 법에 의한 재단 설립은 정치의 도덕성을 일깨웠다. 정치의 도덕성이란 표현은 1998년 12월 독일 대통령 요하네스 라우의 강제노동자들에게 행한 독일의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성명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었다.
b) 독일의 "국가 관료"에 의해 운영되던 이전 독일의 배상 제도와 달리, 본 재단에 들어오는 청구는 독일 관료에 의하지 않고, 이전 "피해 국가들"의 정부에 의해 대부분 지정된 국제 협력 기구들에 의해 관리되어진다. 폴란드에 있는 우리의 협력기관은 폴란드-독일 화해 재단(Polish-German Reconciliation Foundation)이다. 본 재단은 협력 기구들이 법을 올바로 적용하고 국제협력 체계를 잘 조직하는지 단지 감시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이러한 협력 업무는 2007년 완료되었으며 166만 이상의 강제 노동자들(혹은 그들의 자손들)이 43.7억 유로에 달하는 배상을 받았다. 재산 및 의료 실험의 피해자 등 수만명에 달하는 희생자 그룹들 또한 개인적 보상을 받거나 우리 협력 단체들이 조직한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c) 정치적 접근은 역사적 유죄 여부가 아니라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오늘날 사람들과 기업들로 하여금, 정의는 연루된 사람들의 죄를 피하여 얻을 수 없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합니다. 역으로, 죄에 대한 비난을 방지하는 것은 특히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희생자들의 고통을 느끼고, 희생자들과의 만남을 참여하는 의지를 강화시켜 준다.
d) 재단의 감독 이사회는 독일인 회원 뿐만 아니라, 나치 치하에서 가장 고통 받은 폴란드와 같은 국가의 대표자들 및 희생자 단체와 NGO 대표들에 의해 구성된다.

e) 2007년 보상금 지급 체결로, 재단은 그 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본 재단은 과거와 오늘날의 도전 사이에 기억과 책임의 다리를 짓는 지속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재단은 국가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고통 받은 나라들과 독일 사이 협력정신에 입각하여 기억과 협력을 촉진하는 국제적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장기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재단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초점 영역에서 국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위해 연간 7백만 유로를 지원한다.

- 국가 사회주의 희생자들의 역사 및 기억에 대한 주요 연구
-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노력
- 민족 간 이해 및 오늘날 인권을 위한 업무 수행

실제로, 위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의미한다.

- 본 재단은 국가사회주의 정책 시스템 및 강제노동에 관한 대규모 국제 전시회를 발족하고 기금을 마련하였다. 이 전시회의 후원자는 독일 대통령이다. 독일에서 발족 후, 첫 외국 무대는 2011년 모스크바였다. 그 다음 외국 무대는 2012년 말 바르샤바가 될 것이다.
- 본 재단은 20개국 약 600명의 생존자와의 오디오 및 비디오 인터뷰를 포함한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수시간에 걸친 인터뷰 기록들은 학계 전문가에 의해 편집되어 현재 모든 관심 있는 개인 및 국가에 교육적 혹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링크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재단은 생존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고통을 당했으며 전후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영구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기록하고자 한다.
- 본 재단은 국가 사회주의의 살아남은 피해자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그들 나라의 단체들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 본 재단은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이 협력 국가들의 생존자

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에서 1년 간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 본 재단은 생존 강제노동자들을 독일로 초청하여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 본 재단은 베를린의 모든 대학들과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가사회주의 희생자들의 자손들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독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본 재단은 민족과 인권 이해를 위해 일하는 국제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본 재단은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및 인종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집시 등과 같은 소수 민족의 인권 및 능력 고양에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 본 재단은 사회 및 문화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 자원 봉사 활동에 독일, 중부 및 동유럽,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젊은 자원 봉사자들은 사회적 문제에 더욱 눈을 뜨게 되고 주최국의 문화 및 역사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본 재단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사회적, 정치적 변혁의 다차원적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 또한 고통이다.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던 희생자들은 이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되지 않는다. 본 재단의 보상 과정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관계로 대신 그들의 법적 상속인이 전체 혹은 부분적인 보상금을 받았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는 다음 세대와의 개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생존자는 없을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단체-예를 들면, 폴란드와 독일-는 동시대의 사회에서 대중적인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의사 소통을 통한 기억”은 “문화적인 기억”으로 전환되고 있다. 앞으로 젊은이들은 오로지 문서화된 기억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변형의 과정은 또한 우리가 통합된 유럽에 살고 있고 국제교류 및 협력에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당함에 대한 “기억”의 개념은 단순히 현재 이해하고자 하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역사와의 이러한 대립은 또한 오늘날 젊은이들을 위한 자아발견

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은 단순한 질문으로 요약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독일, 폴란드, 모든 유럽에서의 우리 공존을 위해 어떠한 정치적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가?

우리 국가들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유럽의 기억 문화 사이에 살아 있는 대화 속에서 이 부당함의 기억을 영구히 각인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과거의 부당함에 직면한 시민사회나 시민들을 위해, 유럽은 소수민족의 소외,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IV. 주요한 정치적 문제가 남아 있다: 희생자들의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외에, 이웃 국가들에 행하는 본 재단 업무의 궁극적인 영향은 무엇이었나? 독일과 폴란드의 화해에 우리가 주요한 공헌을 하였나? 이러한 질문은 대답하기 어렵지만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에 답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본 재단은 폴란드와 독일간의 화해, 협력 및 유럽 통합을 추구하는 많은 사회적, 정치적 이해 당사자들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본 재단으로부터 받은 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부당하게 대접 받아 왔다는 사실에 대한 독일 정부의 인식 또한 중요하다고 여기는 폴란드의 많은 피해자들을 알고 있다. 부당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에서 보면, 이 부당함에 상응하는 보상은 없다. 이것이 바로 왜 모든 보상은 단지 “상징적”일 뿐인지에 대한 이유이다.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모든 빚을 갚았소”라는 도덕적 함의를 가진 보상을 할 수도 있다. 또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후손인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그 부당함과 피해자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 태도와 자각을 갖고 보상 할 수도 있다. 오로지 후자의 태도만이 진정한 화해 과정에 도덕적인 토대를 구축할 수 있습. 내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본 재단의 업무가 이를 목표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V. 이 글은 독일이 행한 일은 무엇이며 그 행동의 “숨겨진 이유”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다. 나는 부당함의 역사를 지닌 다른 국가들 또한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지닌 각 나라는 과거와 희생자들의 청구 및 권리, “과거의 거울”을 들여다볼 정직한 시선에 대한 필요에 나름

의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부당함을 극복하기 위한 무시나 거부는 사회와 국가 간 화해와 평화를 방해하며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 한국, 기타 아시아 국가들, 그들의 민족, 시민단체들이 진실과 역사적 자각, 과거와의 화해로 가는 깊이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 : National Socialism and the long road to reconciliation
## - the work of the Foundation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and its international partner organizations
## *(with special remarks on the polish-german relationships)*

Günter Saathoff(Co-Director of the Foundation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EVZ), Germany)

The Foundation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EVZ) was founded only very late. It was not until the year 2000 that a federal law called for its establishment. At the heart of the institution was the question of how Germany could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injustice of forced labour under the National Socialist regime – something it had long denied – and how the surviving victims could be compensated for the wrong they had suffered. The bitter debate about whether or not Germany's government, industry and society needed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this injustice during the National Socialist period was carried out for over a decade in the German public and subsequently also abroad. Class action lawsuits in US courts against German companies who had profited from this injustice finally brought about the political breakthrough which led to the constitution of our foundation. Government and industry paid a total of 5.1 billion euros into the Foundation's capital.

At the end of this process was a compensation payments programme that reached over 1.7 million victims of National Socialism in 98 countries, most in Poland and Ukraine. This programme was carried out in partnership with those countries that had suffered most under National Socialism, including the successor states to the Soviet Union (Ukraine, Belarus and Russia) and the Czech Republic. At the same time, the Foundation was given the mandate of keeping alive the memory of this injustice for future generations and of funding international projects that offer social support to the surviving victims and promote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oday. Thus, the Foundation's work was and is viewed as part of Germany's contribution to the process of intensifying reconciliation with these countries and to understanding between our societies.

What wa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is development? Why was such a foundation set up only so late? How was the programme of compensation payments implemented? And what significance did it have for the survivors and for the relations between our societies and governments today? These are the questions that I wish to address today.

*However, I will begin with a few important introductory remarks:*

I. The crimes committed in Germany from 1933 to 1945 under National Socialism are well nigh impossible for us to grasp today. The most egregious of these include:

- the murder of six million European Jews and almost 500,000 Sinti and Roma all over Europe and the murder of millions of people of Slavic nationality,
- responsibility for a war of conquest that culminated in the deaths of 60 million people in World War II, and
- the deportation of more than 12 million people from their home countries to Germany, where they were forced to work, often under desperate conditions, in camps, public sector institutions, industry and the agriculture sector.

Most of the people killed and also the majority of deported forced

labourers came from Poland and the former Soviet Union.

The war begun by the National Socialist regime had a racist concept: people were divided into a "master race" and "sub-humans." The latter group had no guaranteed right to life; the regime viewed them solely as an exploitable labour force.

Through the crimes of the National Socialist regime, Germany effectively excluded itself from the "family of civilised states" and the standards of human civilisation. After 1945 when it looked into the mirror of its past and crimes, Germany had to answer questions like: What did we do? Can we ever make amends? Who was guilty of all these crimes? Were these only state crimes or was the whole country guilty? And: What do we owe the victims? How do we keep remembrance alive and create a new future under the motto "Never again"?

Remember that Germany was not able to liberate itself from the scourge of the National Socialist regime. The country was liberated by the opposing forces, the Allies – the victors in 1945. Afterwards the Nuremberg War Crimes Trials were held in 1945/46, similar to those in Tokyo from 1946 to1948 against Japan.

A few years after the end of the war, Germany was divided into two countries and was thereby drawn into the dynamics of the Cold War. This entailed new political and psychological power structures, the division of Europe with the Iron Curtain at its centre and also a new set of enemy images.

All this initially had consequences for the willingness and ability of Germans to come to terms with the historical injustice of National Socialism.

II. Conversely, from the end of the 1940s onwards, the will to persistently confront the injustice, for example by prosecuting Nazi criminals, was already abating significantly because the USA neede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s an ally in the Cold War. The Soviet Union neede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the other part of divided Germany, in this Cold War, too.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which, like Poland, fell under the Soviet sphere of influence, paid extensive war reparations to the Soviet Union and also, in part, to Poland until 1953. However, this German state did not accept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the wrongs committed under National Socialism. The Cold War meant that there was no internal political confrontation with the injustice of National Socialism for many years in Germany. Given that the countries whose people had borne the brunt of these offences were now part of the hostile communist camp under the Soviet Union, it was initially easy for Germany to evade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this past injustice. This made the road to reconciliation with Poland protracted and very complicated. We do not have enough time today to go into the dynamics of this process and the various government agreements since the 1970s.

Within this context, Germany needed fifty years, step by step, in a complicated historical and political process, to find the "moral impetus" to again "look into the mirror of history and morality," face its obligations rooted in history and determine what needed to be done.

Over the decades, the process of coming to terms with injustice has gradually detached itself from the self-justification of perpetrators and hangers-on, to be replaced by academic and political debate among the generation that did not personally experience the events in question.

From the 1980s onwards, the debate took an increasingly holistic approach to confronting genocide, especially the Holocaust,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 most important dimensions were a turning towards the victims and their claims for restitution and compensation and society's (self-) clarification of the causes and social dynamics of complicity.

This process of coming to terms with Nazi injustice underwent a process of cultural and political maturation, first from a German national perspective, then internationally – a process that is still not over.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re was an historical break in 1989. The Cold War had allowed Germany to reject claims from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related to Nazi injustice. It was however not surprising that, with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sphere of control and the accompanying end of the Cold War from 1989 onwards, these same claims could no longer be denied and dismissed.

Over five decades, Germany created a number of laws and financial schemes as "compensation" and "restitution" for the victims of the National Socialist regime. From 1949 until 2010,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made payments to victims of National Socialist injustice *[or their heirs]* in the sum of 68 billion euros.

However, because of the Cold War, most of these schemes did not cover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beneficiaries of these earlier compensation programmes were only in Germany and the western countries. Except for a few special provisions – for example, for the victims of Nazi medical experiments – the victims of National Socialism in Poland and other Eastern Bloc countries had no access to German compensation laws and programmes.

It was only with a democratic government in Poland after the fall of the Iron Curtain in 1989 and in connection with German negotiations to recover its sovereignty within a European peace framework that conditions were in place for the first compensation agreement with Germany. In 1991 Poland received 500 million Deutsche Mark (256 Mio. €) from Germany as a lump-sum compensation for those victims who had suffered most under National Socialist injustice. However, restitution for forced labour under National Socialism was not among 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arrangement. This issue remained unresolved until it was finally addressed with the founding of the Foundation EVZ.

III. The Foundation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was an additional and "modern" answer by Germany's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o the question of how to deal with crimes against humanity, especially forced

labour under the National Socialist regime. It was also a way to learn about history.

A federal law established the Foundation in 2000 as the culmination of three political processes. Firstly, the Social Democrat/Green federal coalition issued a government declaration in 1998 stating that it wished to establish "a federal foundation for former forced labourers with the involvement of German companies." Secondly, Central European countries and international Jewish organisations, in particular, exerted increasing pressure after 1989, with an emphasis on the issue of forced labour under the Nazis, which had been excluded from German compensation law for so many years. Finally, legal proceedings were brought in the USA against major German companies that had used forced labourers or had benefitted from the expropriation of the property of victims of the National Socialists.

The establishment of this Foundation, which at that time was funded with 5.1 billion euros – half from the state, half from private companies – was a "modern" answer, because it contained certain elements that can be described as a more comprehensive "cultural achievement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I wish to specify just a few important aspects:

a) The creation of the Foundation by law brought in its wake a moralisation of politics, which found its most visible expression in the public apology in December 1998 by then German President Johannes Rau for the injustice Germany had inflicted on the forced labourers.

b) In contrast to former German payment schemes, which were administrated by a German "state bureaucracy," the claims under the Foundation EVZ law were not received, processed, decided upon or met by a *German* office, but by international partner organisations that were for the most part designated by the governments of the former "victim countries." Our partner in Poland was the Polish-German Reconciliation Foundation. The Foundation EVZ

merely had the function of monitoring whether the partner organisations were correctly applying the law and organis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 As a result of this joint action, which was completed in 2007, more than 1.66 million forced and slave labourers *[or their legal heirs]* received payments amounting to 4.37 billion euros. Some other groups of tens of thousands of victims – for example, those with property claims or victims of pseudo-medical experiments – also received individual payments or were involved in humanitarian projects organised by our international partner organisations.

c) The political approach did not concentrate on questions of historical guilt, but on responsibility for the victims. This enabled today's people and companies to support the consensus that justice could not be served through accusations of guilt on account of the age of those involved. Conversely, avoiding accusations of guilt strengthened the willingness, especially of younger people, to take responsibility, open themselves to the perspective and suffering of the victims and participate in encounters with the victims.

d) The Foundation's supervisory board is comprised not only of German members, but also of representatives of the countries, such as Poland, that suffered most under the Nazi regime, and representatives of victim organisations and NGOs.

e) With the conclusion of compensation payments in 2007, the Foundation did not regard its work as complete. On the contrary, the Foundation underlines its continued responsibility to build bridges of remembrance and responsibility between the past and today's challenges.

The Foundation has a long-term mandate to support international projects that promote remembrance and cooperation in a spirit of partnership between Germany and those countries subjected to particular suffering under National Socialism.

The Foundation provides around seven million euros each year, primarily

for international programmes and projects in the following three focus areas:

- A critical examination of history and remembrance of the victims of National Socialism
- Humanitarian commitment to these victims
- Working for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and for human rights today

In practice, this means that:

- The Foundation initiated and financed a large-scale international exhibition on the system of National Socialist domination policy and forced labour. The German President is patron of this exhibition. After its inauguration in Germany, its first foreign station was in Moscow in 2011. Its next foreign station is to be Warsaw at the end of 2012.
- The Foundation carried out a wide-ranging project involving audio and video interviews with almost 600 survivors from over 20 countries. The interviews, which are several hours long, have been edited by academic experts and are now available on the internet to all interested, thus in other countries as well, to use for educational or research purposes. In this way, the Foundation wishes to permanently and publicly document the point of view of the survivors themselves regarding what they experienced, suffered and worked through in the post-war period.
- The Foundation organises humanitarian assistance for the surviving victims of National Socialism, administrated by organisations in their countries.
- The Foundation participates in a youth exchange programme, in which young people spend one year working in humanitarian projects for survivors in our partner countries.
- The Foundation supports projects that invite former forced labourers to visit Germany and encourages young people to explore the life stories of these

persons.

- The Foundation implemented a scholarship programme with all Berlin universities, which gave young people who are the descendants of victims of National Socialism the opportunity to study in Germany.
- It promotes international initiatives that work for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and human rights.
- It promotes active commitment to the human rights and empowerment of minorities like Sinti and Roma, while working to combat xenophobia, anti-Semitism and racism.
- It encourages young people from Germany,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Israel to undertake international volunteer work in social and cultural projects. Through their active involvement, the young volunteers become more aware of social issues and acquir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and history of the host country.

These examples of our activities make it clear that the Foundation is involved in a multi-dimensional process of social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This is also painful. The victims, who were disregarded for so long, have now received social recognition. We are able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many of them still today, but they will all have died in the next few years. For the Foundation EVZ's payments process, this has already meant that many applicants did not live to receive the payments due them and that these went instead, in whole or in part, to their legal heirs. Thus, very soon, there will be no more survivors for personal communicative encounters with the following generation. They and their associations are also losing their public presence in contemporary society, in Poland and Germany, for example. Thus, "communicative remembrance" is shifting to "cultural remembrance." In future, young people will only have the documented memories. However,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also means that we live in a united Europe and that there are

infinitely many levels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of need for cooperation.

The concept of the "remembrance" of injustice means more than merely looking back to a past that one wishes to understand now. This confrontation with history also constitutes a process of identification for young people today – a process that can be summarised in a simple question: what does this history – and for Poland this history includes Stalinism – mean for us personally today? And what political conclusions do we draw from it for our coexistence today, in Germany, in Poland, but also in all of Europe?

I see two tasks that our countries must complete. The first is that we can permanently anchor the memory of this injustice in a living dialogue between European remembrance cultures. The second task is for both countries, their civil societies and citizens, with their background of confronting past injustice, to support European policies that actively counteract the new marginalisation of minorities, growing nationalism and xenophobia.

IV. A key political question remains: Beyond meeting the material needs of the victims, what has been the ultimate impact of the Foundation EVZ's work in our neighbouring countries? Have we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reconciliation between Germany and, for example, Poland? Such a question is difficult to answer and should not primarily be answered by those who have provided this material support. Furthermore, the Foundation is only one among many social and political stakeholders who are seeking Polish-German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ultimately the European integration of both countries.

We know from many victims for example living in Poland that not only the money they received from the Foundation EVZ, but also Germany's recognition that they had been treated unjustly was important to them. There is no possible restitution, in the deepest sense of the word, for this injustice. That

is why all payments were only "symbolic" payments, with respect to both the amount and the rationale. One can make such payments with a moral undertone of: "Now don't come back; we have paid our debt." Alternatively, such a programme can be implemented with the awareness and the moral attitude that we – also we, the descendants – are still ashamed, even decades later, and will not forget the injustice or its victims. Only this latter attitude builds the moral foundation for a real process of reconciliation. I can only hope that the work of the Foundation EVZ has contributed to this end and will continue to do so.

V. My remarks were intended to show what Germany has done and also in part to reveal the "internal rationale" behind its actions. I am not advocating that other countries with their own particular histories of injustice should tread this same path. Each country that bears responsibility for war crim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has to find its own way of dealing with the past, with the claims and rights of the victims and with its need to take an honest look into the "mirror of history." But it is also true that *neglecting or* refusing to come to terms with injustice will impede reconciliation and peace between societies and countries for generations to come and may sow the seeds of new conflicts. This is the reason why nations like Japan,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as well as their populations and NGOs should be encouraged to find deeper paths to truth, historical awareness and reconciliation with the past.